

수시연구 2012-01

귀어·귀촌의 실태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The Current Status of 'Return-to-Farming/
Fishing Villages' and Policy Direction

2012. 12.

이승우 · 박상우 · 고민규

◆ 보고서 집필 내역

● 연구책임자

- 이 승 우 : 제1장, 제3장(일부), 제4장, 제5장

● 연구진

- 박 상 우 : 제2장, 제3장(일부)
- 고 민 규 : 제3장

● 외부 집필진

- 리서치 앤 리서치 : 제3장

◆ 산·학·연·정 연구자문위원

● 마 상 진(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

● 이 광 남(수산정책연구소 박사)

● 이 명 준(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 연구자문위원은 산·학·연·정 순임

◆ 연구감리자

● 신 영 태(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머 리 말

우리사회에서 귀농·귀촌은 도시 생활을 접고 제2의 삶을 준비하는 많은 도시민들에게는 이미 친숙한 용어이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귀농은 단순한 직업의 전환이나 거주지의 이전이 아니라 삶의 전환이며,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낭만이 아니라 자산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데 있다. 반면 귀어·귀촌은 여전히 생소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고도의 압축성장을 거쳐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소위 말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귀농·귀어에 대한 정책적인 노력도 경주되고 있다. 2010년부터 귀어·귀촌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동 사업은 고령화·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어촌사회에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을 유입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어촌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귀어·귀촌은 어업과 어촌사회의 배타성으로 인해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어촌의 진입장벽은 기존 어촌계와 어떠한 상생적 구조를 갖추는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면허·허가, 어장, 어선 등 어업생산기반을 갖추기까지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귀어의 주제로 수행되는 최초의 연구이기 때문에 어업과 어촌사회에 내재된 진입장벽을 완화·해소하기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는 앞으로 어촌정책에 있어서 어촌사회에 새로운 인력을 유입시킴으로써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연구본부 이승우 연구위원, 박상우 전문연구원, 고민규 전문연구원이 집필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박사,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 이광남 박사, 농림수산식품부 이상기 사무관, 본원의 신영태 선임연구위원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자료수집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 관계 기관의 담당자들에게도 글을 빌려 감사드리고자 한다.

2012년 12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원 장 김 학 소

차 례

Executive Summary	i
-------------------	---

제1장 서 론	1
---------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내용	4
3)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5
4. 선행연구 검토	6

제2장 귀어·귀촌 정책 및 추진 실태	10
----------------------	----

1. 귀어·귀촌 정책의 법적근거	10
2. 귀농·귀촌 실태 및 관련 정책	11
1) 귀농·귀촌의 실태	11
2) 귀농·귀촌 정책의 특성과 주요 내용	13
3. 귀어·귀촌의 실태 및 정책	18
1) 귀어·귀촌의 실태	18
2) 귀어·귀촌 정책의 특성과 주요 내용	19

제3장 귀어·귀촌 설문조사	23
----------------	----

1. 조사 개요	23
----------	----

1) 조사설계	23
2) 도시민 응답자의 특성	24
3) 정부 지원 귀어인 응답자의 특성	26
4) 정부 미지원 귀어인 응답자의 특성	27
2. 도시민 설문분석 결과	28
1) 귀촌 의향	28
2) 귀어 의향	32
3) 귀어 준비	36
4) 도시민 설문분석 결과 종합	39
3. 귀어인 설문분석 결과	41
1) 귀어 현황	41
2) 귀어에 대한 인식	46
3) 귀어 과정	49
4) 귀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진 정책	52
5) 귀어인 설문분석 결과 종합	53
4. 귀어·귀촌 정책의 문제점	54
1) 추진 실태상 문제점	55
2) 설문조사를 통한 귀어·귀촌 정책의 문제점	58
 제4장 귀어·귀촌 정책방향	 60
1. 귀어·귀촌 정책의 목표 및 정책방향	60
1) 귀어·귀촌 정책의 목표	60
2) 귀어·귀촌 정책방향	61
2. 귀어·귀촌 정책 과제	65
1) 귀어·귀촌 실태의 정보화	65
2) 체계적이고 다양한 귀어·귀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66
3) 귀어·귀촌 진입장벽 완화	67

4) 귀어·귀촌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69
3. 귀어·귀촌 정책의 추진 주체와 역할	70
1) 귀어·귀촌 정책의 추진 주체	70
2) 귀어·귀촌 정책의 추진 주체의 역할	71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73
1. 결 론	73
2. 정책 제언	74
 참 고 문 헌	 79
 부록 1. 지자체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	 80
부록 2. 귀어·귀촌 대상자 설문조사	84
부록 3. 귀어·귀촌에 관한 도시민의 인식조사	88

표 차례

표 2-1. 귀어·귀촌 정책의 법적 근거	10
표 2-2. 지역별 귀농·귀촌 현황(2011년)	12
표 2-3.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2011년)	12
표 2-4. 귀농자 주작물 현황(2011년)	13
표 2-5. 중앙정부의 귀농·귀촌관련 정책사업	14
표 2-6. 공공기관(농촌진흥청)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사업	15
표 2-7. 민간기관 단위의 귀농·귀촌 관련 사업	17
표 2-8. 업종별 귀어 현황(2010~2011년)	18
표 2-9. 지역별 귀어 현황(2010~2011년)	19
표 2-10. 귀어인 수산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21
표 2-11. 귀어가 어촌정착 교육 프로그램(수산인력개발원)	22
표 3-1. 조사설계 내용	24
표 3-2. 도시민 응답자의 특성	25
표 3-3. 응답자의 특성(정부 지원)	26
표 3-4. 응답자의 특성(정부 미지원)	27
표 3-5. 귀촌 고려지역	28
표 3-6. 귀촌 계획시기	29
표 3-7. 어촌이주 동기	31
표 3-8. 어업종사 의향	32
표 3-9. 귀어 시 고려 업종	33
표 3-10. 수산계 교육과정 이수 여부	34
표 3-11. 수산업 종사 경험 여부	35
표 3-12. 수산업 종사 분야	36

표 3-13. 귀어 준비 경로	37
표 3-14. 귀어 준비 시 어려움	38
표 3-15. 귀어를 위한 정부의 시행 정책	39
표 3-16. 귀어형태와 어업종사 유형(정부 지원)	42
표 3-17. 귀어형태와 어업종사 유형(정부 미지원)	42
표 3-18. 종사 업종(정부 지원)	43
표 3-19. 종사 업종(정부 미지원)	43
표 3-20. 업종 선택 이유(정부 지원)	44
표 3-21. 업종 선택 이유(정부 미지원)	45
표 3-22. 귀어 전후 연평균 소득 (정부 지원)	45
표 3-23. 귀어 전후 연평균 소득 (정부 미지원)	46
표 3-24. 귀어 결정 이유(정부 지원)	47
표 3-25. 귀어 결정 이유(정부 미지원)	47
표 3-26. 귀어 지역 선택 이유(정부 지원)	48
표 3-27. 귀어 지역 선택 이유(정부 미지원)	49
표 3-28. 귀어 결정 시 어려움(정부 지원)	49
표 3-29. 귀어 결정 시 어려움(정부 미지원)	50
표 3-30. 지역주민과의 관계(정부 지원)	50
표 3-31. 지역주민과의 관계(정부 미지원)	51
표 3-32. 향후 의향(정부 지원)	52
표 3-33. 향후 의향(정부 미지원)	52
표 3-34. 정부/지자체에서 더 강화해야 할 정책(정부 지원)	53
표 3-35. 정부/지자체에서 더 강화해야 할 정책(정부 미지원)	53
표 3-36. 귀농·귀어 정책의 비교	57
부표 1.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	80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체계	6
그림 2-1.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수 현황	11
그림 2-2. 귀농·귀촌 지원 지자체 분포	16
그림 2-3. 귀어·귀촌 지원 프로세스	20
그림 4-1. 귀어·귀촌 정책 추진 체계도	71

Executive Summary

The Current Status of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and Policy Direction

1. Purpose

- The study analyzed conditions and factors in the way of carrying out effective policies for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Its goal is to explore policy direction and tasks to address these problems.
 - It reviewed policies for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to address dwindling and aging population at fishing villages as well as to develop and attract human resources for these villages’ vitalization.

2. Methodologies and Feature

1) Methodologies

- Literature analyses on relevant reports, policy materials and internet materials
- Interviews and surveys with city dwellers, rural returners and public officials

2) Feature

-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policies for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and conducted surveys with city dwellers on rural life awareness and rural re-

turners on the real rural life. Based on the results, it presented policy direction for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3. Results

1) Summary

- To show problems with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through analyses on the current status and supporting policies
 - Lack of the information center which gathers and distributes relevant information
 - Insufficient statistics on rural returners due to inadequate fact-finding investigations
 - Deficient effects of education due to simplified programs on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 Inefficient policies due to the unsatisfactory implementation system
- Surveys and analyses with city dwellers on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 25% of respondents (city dwellers who want to go back to fishing villages) showed their intention to engage in the fishing and 51% of them wanted to do tourism business.
 - Those around 55 years old wanted to return to fishing villages and 60% of them would do so to live quiet lives for the rest of their days.
 - They said that the prime need is the relevant information required for their return to rural life.
- Surveys and analyses with rural returners on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 Those returned to fishing villages registered high levels of U-shaped turns

to cities again.

- They wanted to increase the size of supporting funds and to loosen the conditions for funds.
- They asked for constant consulting after they returned to fishing villages.
- Policy direction and tasks for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 Policy direction: effective policy response to social and economic demand for fishing villages; sustainable fishing village development through policies for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gradual openness of fishing villages through those policies and linkage between fisheries policy projects; and policies for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 Task: construction of information system on actual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systematic and operation of various education programs on the subject; lowering entry barriers to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creation of social jobs for those who returned to farming/fishing villages; and building of independent work system for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2) Policy contribution

- To serve as the basic material in setting direction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3) Expected effects

- To contribute to establishing an effective implementation system of policies for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 To improve investment effects by setting policy tasks for ‘return-to-farming/fishing villages’ and linking them with fisheries policies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수산자원의 감소와 어촌인구의 노령화로 인하여 어업의 생산성이 떨어져 어촌소득에서 어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그 결과 어촌의 청장년층이 어촌을 떠남에 따라 어촌인구의 노령화와 어촌의 과소화가 심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어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어촌의 공동화를 염려하는 단계에 이르렀지만, 어촌으로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희망의 소식도 들려 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말 기준으로 귀농·귀촌 가구가 1만 503가구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농어촌으로 정착하는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 주요 원인은 베이비 부머(baby boomer)세대의 은퇴로, 이러한 현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아실현을 추구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농어촌으로 이주하려 움직임이 늘고 있어 앞으로 은퇴 이전 젊은 층의 농어촌 이주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은 신규 인력의 유입이 절실한 어촌에 도시민 이주에 대한 기대를 높여 준다.

그러나 도시민이 귀어·귀촌을 결심하고 어촌으로 이주할 때 여러 가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즉 도시와 상이한 생활환경인 어촌으로 이주시 부딪히게 될 가족 구성원의 반대, 경제적 문제, 낯선 환경과 이웃과의 갈등 문제 등은 이주를 결정하기 전후부터 완전히 어촌에 정착할 때까지 계속 해결해야 할 문제다.

또한 어촌의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어업의 법·제도적 특성으로 어촌은 농촌보다 배타성이 강한 지역이다. 이와 같은 배타적 특성을 갖는 어

촌에 거주하는 주민은 외부 환경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즉 배타적인 어촌주민은 국내외 여건의 변화에 따른 어촌의 위기를 자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응수단의 개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귀어·귀촌 정책에 대한 정책의 수용성이 낮은 어촌주민이 거주하는 어촌에 도시민이 이주하기 쉽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어업의 특성으로 귀어·귀촌인의 어업 종사를 막는 진입장벽이 높아 귀농정책과 다른 귀어·귀촌 정책의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 정책과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0년부터 영어정착자금, 어가주택구입비, 빈집수리비, 귀어·귀촌의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민의 귀어를 촉진하고 있다. 2010년도의 창업자금 지원자는 60명, 2011년도의 창업자금 지원자는 36명, 2012년도의 창업자금 지원자는 62명이었다. 이와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의 귀어·귀촌 정책은 귀어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귀어·귀촌 정책이 도시민의 어촌이주를 촉진시키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귀어·귀촌 정책은 귀어인에 대한 정책금융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즉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어촌기술센터를 통하여 귀어인의 정책금융의 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어촌으로 이주를 고려하는 도시민이 귀어·귀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귀어·귀촌센터는 없다. 따라서 예비 귀어·귀촌인이 어촌으로 이주하기 위한 사전 정보 수집하고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도시와 여건이 상이한 어촌으로 이주함에 있어서 예비 귀어·귀촌인이 어촌에 정착하고, 어촌에서 소득을 얻는 데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귀어·귀촌인을 대상의 교육과정은 수산인력개발센터의 ‘귀어가 정착 교육프로그램’이 유일하다. 따라서 귀어·귀촌인의 수요에 대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귀어·귀촌인의 어촌 정착에 필

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준비가 필요하다.

어촌은 지리적 및 법·제도적 여건으로 도시민의 어촌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귀어·귀촌인이 어촌에 이주할 경우에 소득을 얻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또한 귀어·귀촌인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귀어·귀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귀어·귀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귀어·귀촌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귀어·귀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귀어·귀촌 정책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2. 연구의 목적

2010년부터 정부는 어촌의 경제적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귀어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귀어·귀촌 정책은 예비 귀어·귀촌인과 이미 어촌으로 이주한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귀어·귀촌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의 걸림돌이 되는 여러 여건과 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귀어·귀촌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어촌인구 감소와 노령화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귀어·귀촌 정책을 살펴봄과 동시에 어촌 활성화를 위한 인적자원의 육성과 유입의 정책으로서 귀어·귀촌 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가 도출한 귀어·귀촌 정책방향과 과제가 귀어뿐만 아니라 귀촌을 활성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즉 어촌을 단순히 ‘수산물을 잡는 마을’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과 공간을 활용하는 어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할 경우에 농촌과 다른 어촌의 여건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적자원을 어촌으로 이주시키는 귀어·귀촌 정책 수립과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적자원의 어촌 이주를 통하여 어촌의 다기능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농림수산식품부는 귀어·귀촌 정책과 귀농·귀촌 정책을 분리하지 않고, 「귀농·귀촌 종합대책」에서 귀어가의 정책 금융을 중심으로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귀농·귀촌 종합대책」 중 귀어중심의 귀어·귀촌 정책 범위를 넘어서 어촌활성화를 위한 귀어·귀촌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를 다룬다. 즉 귀어가의 정책금융 중심의 귀어·귀촌 정책에서 벗어나 어촌 활성화와 연계한 귀어·귀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방향을 토대로 귀어·귀촌 정책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귀어·귀촌 정책 과제의 세부적 추진방향과 추진내용, 추진체계 등은 본 연구기간과 연구비용의 한계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베이비 붐 세대의 농어촌 이주와 생활 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농어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귀농·귀촌 종합대책」 중 귀어·귀촌 정책의 효

율적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기초 연구다. 귀어·귀촌 정책의 추진 실태를 조사하고,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귀어·귀촌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며,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범위 및 내용, 연구방법, 연구추진체계, 선행연구 등을 서론에서 서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의 현황, 귀어·귀촌정책의 실태와 법·제도 및 추진체계 등을 다루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어·귀촌에 대한 의향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앞에서 조사 및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귀어·귀촌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귀어·귀촌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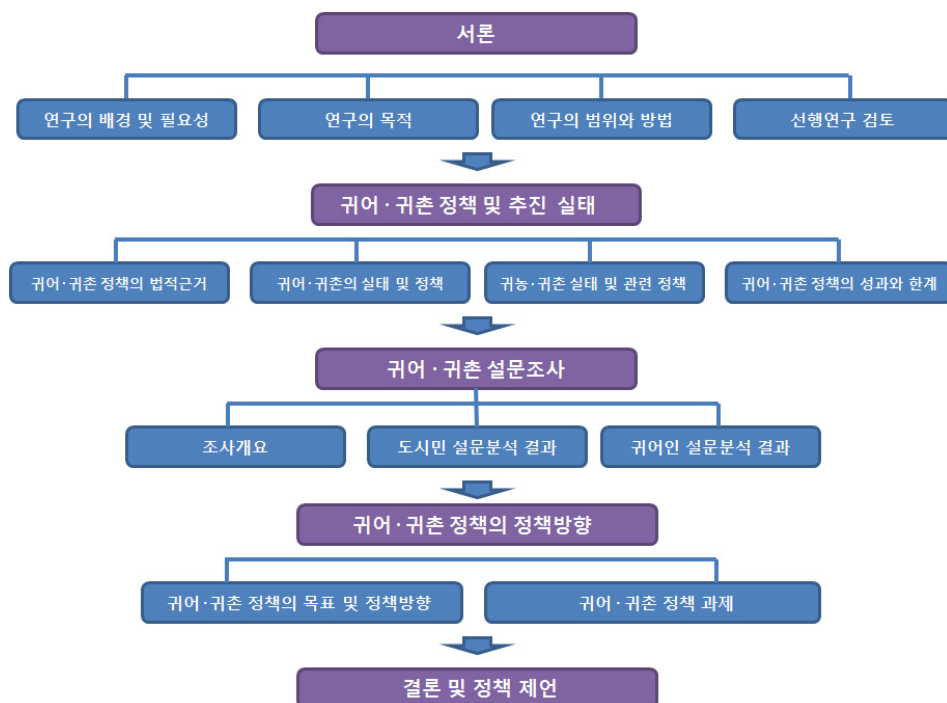
3)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본 연구는 귀어·귀촌 정책방향과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문헌조사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귀어·귀촌 정책의 실태와 법·제도,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고서, 정책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귀어·귀촌 관련 문헌조사의 자료는 귀농·귀촌과 관련 자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어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문헌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귀어·귀촌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면담을 통하여 귀어·귀촌 정책의 한계를 조사하였다.

귀어·귀촌에 대한 설문조사는 예비 귀어·귀촌인인 도시민, 귀어가 정책 금융 혜택을 받은 귀어인 중 수산인력개발센터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과 귀어·귀촌 정책 금융과 관계 없이 어촌계에 가입하여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귀어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설문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전화설문으로 이루어졌다.

이상의 연구방법으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 그림 1-1 | 연구체계

4. 선행연구 검토

1차 산업인 어업 노동력의 공급공간인 어촌의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노령화가 빠르게 진전됨에 따라 어업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더욱이 어업에 필요한 적정 노동력 확보가 수산정책과제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에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와 함께 귀농·귀촌에 대한 연구도 이 대책의 수립 전·후에 본격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귀어·귀촌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귀어·귀촌에 대한 선행연구로서 귀농·귀촌에 대한 연구를 살펴 보았다.

『귀농·귀촌 정책의 방향과 과제』(김정섭, 2012년)의 연구는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된 쟁점들을 정리하고, 적절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귀농·귀촌의 쟁점사항으로 귀농·귀촌 정책의 규범적 토대,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사회에 끼칠 영향과 사회 연결망, 이주 및 지역사회 적응에 따르는 거래비용과 리스크 등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귀농·귀촌 정책의 규범적 토대로서 ‘자유주의 국가론’, ‘공리주의’, ‘규범적 정의론’ 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본 후에 세 가지 관점 중 어느 하나만을 전적으로 취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귀농·귀촌 문제에 대한 정부 개입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귀농·귀촌은 도시민의 주거지와 직업의 선택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주장하였다. 또한 귀농·귀촌이 농촌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논거로서 ‘자금 유입론’, ‘혁신적 인적 자본 유입론’, ‘사회자본(social capital) 형성론’ 등을 들었다. 또한 귀농·귀촌이 도시민의 개인 행위이지만, 귀농·귀촌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적응에 따르는 거래비용과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정책의 한 부분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확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사회적 비용은 커질 것이고, 국민의 부담 또한 커질 것이다. 귀농·귀촌자가 지역에 적응함할 때 장애요소의 대표적인 것은 진입장벽이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농촌 지역사회에 구조화된 사회 연결망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는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로서 귀농·귀촌의 초기 안내자 역할 수행, 귀농·귀촌 문제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 귀농·귀촌 관련 법·제도 정비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제로서 다양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업무구조 구축, 지역의 민간

사회단체의 참여 촉진, 귀농·귀촌자의 재능과 역할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귀농·귀촌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앞서 귀농·귀촌의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김성아, 2010년)는 기존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시민의 귀농·귀촌 실태를 분석하여 귀농·귀촌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귀농·귀촌의 추이, 도시민의 귀농·귀촌 수요와 특징, 귀농·귀촌인의 생활 실태와 정책요구,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귀농·귀촌의 추이에서 도시민의 농어촌 이주 의향은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농촌에서 실현하려는 욕구가 주요한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기존 연구의 설문조사를 토대로 표본을 다양하게 분류하여 표본 간의 귀농·귀촌의 수요의 특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귀농·귀촌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다. 예를 들어 농어촌에 이주한 집단과 농어촌에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집단의 귀농·귀촌 이유를 상호 비교하였으며, 연령별로 귀농·귀촌 이유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와 비수도권 거주자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목적지 선택에 대한 결과를 상호 비교하고, 이주 목적지 선택 시 고려사항을 조사하였다. 이와 같이 귀농·귀촌인의 귀농·귀촌의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정부의 귀농·귀촌 정책의 효율적 수행 과제를 도출하였다. 농어촌 이주·정착 시 겪은 어려움, 재이주 도시민의 귀농·귀촌 정착 실패의 경험, 성공적인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소요 기간 등을 조사하여 귀농·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비형 귀농·귀촌 주거지 조성 정책의 확대, 빈집 재정비 등을 통한 귀농·귀촌인의 임시 거처 지원 확대, 귀농·귀촌인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귀농·

귀촌 통합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의 다변화 등을 귀농·귀촌 정책 과제로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귀농·귀촌에 대한 기존 연구 중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설문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귀농·귀촌의 수요와 애로사항 등을 분석함으로써 귀농·귀촌의 정책 과제를 도출한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진입장벽이 농촌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어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귀어·귀촌 정책 과제로서 적용하기에는 미흡하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과소화가 진전되고,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도시민의 삶에 대한 태도가 변화함에 따라 귀농·귀촌 정책은 농촌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귀농·귀촌과 관련한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 추세에 따른 선행연구는 귀농·귀촌 정책방향 정립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상기 연구의 범위가 농촌으로 한정되어 있어 귀어·귀촌 정책의 방향 혹은 정책 과제로 활용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귀어·귀촌 정책방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2장 귀어·귀촌 정책 및 추진 실태

1. 귀어·귀촌 정책의 법적근거

최근 대두되는 귀어·귀촌 정책은 2009년 앞서 도입된 귀농·귀촌 정책이 도입된 이후 2010년 「귀어·귀촌 종합대책」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지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농어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지원)를 근거법령으로 하고 있다.

표 2-1 | 귀어·귀촌 정책의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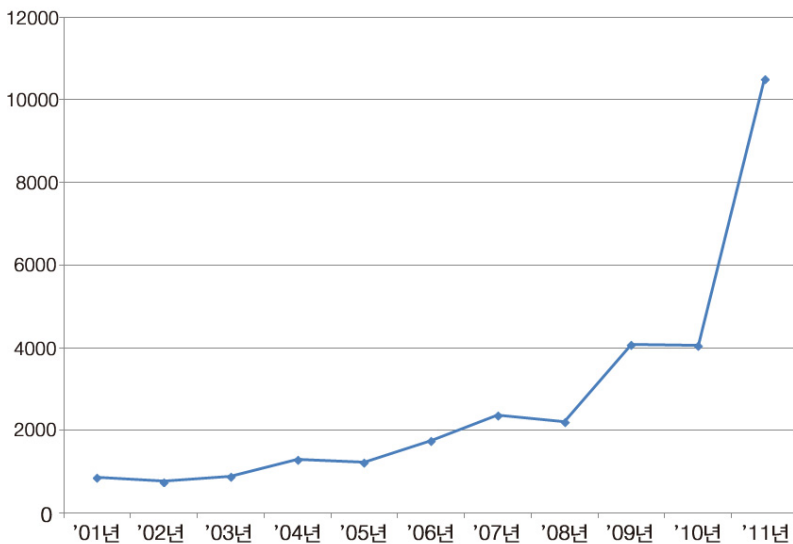
구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9조
사업 주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대상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	농어업경영체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양, 어장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 농어업 재해 및 농어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 농어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어업인의 농어업 경영 이양 및 농어업 생산자원(어선, 어장 포함)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 농어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 농어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및 농어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 특정 품목 및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어가 단위 소득 보조 · 다른 산업으로 전업하거나 재취업자의 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알선, 전업 및 재취업 장려금의 지원, 실직농어업인의 생활안정지원 등 	지속적인 경영 혁신을 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농어업 경영의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2. 귀농·귀촌 실태 및 관련 정책

1) 귀농·귀촌의 실태¹⁾

(1)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2011년 귀농·귀촌 가구 수는 전년 대비 158% 증가한 1만 503가구, 2만 3,415명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귀농은 6,541가구(62.3%), 귀촌은 3,962가구(37.7%)로 조사되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귀농·귀촌의 가구 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1년 급증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2009년부터 시행된 귀농·귀촌 정책사업과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 그림 2-1 | 연도별 귀농·귀촌 가구 수 현황

1) 농림수산물식품부(2011), 201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재정리한 자료임

(2) 지역별 귀농·귀촌 현황

귀농·귀촌의 가구 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원 2,167가구(20.6%), 전남 1,802가구(17.2%), 경남 1,760가구(16.8%), 경북 1,755가구(16.7%)로 나타났다.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이유는 수도권과의 인접성 때문이었으며 전남, 경남, 경북지역은 농지가격, 농지구입 용이성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으로 많이 편중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2 | 지역별 귀농·귀촌 현황(2011년)

단위 : 가구, 명, %

구분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인천
가구 수 (비율)	10,503 (100.0)	224 (2.1)	2,167 (20.6)	582 (5.5)	727 (6.9)	1,247 (11.9)	1,802 (17.2)	1,755 (16.7)	1,760 (16.8)	115 (1.1)	123 (1.2)
인구 수 (비율)	23,415 (100.0)	470 (2.0)	4,040 (17.2)	1,196 (5.1)	1,727 (7.4)	3,043 (13.0)	4,393 (18.8)	4,031 (17.2)	3,980 (17.0)	305 (1.3)	226 (1.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2011.

(3)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

연령별 귀농·귀촌의 현황을 보면 은퇴를 가장 많이 고려하는 40~50대가 전체의 5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농업분야의 신규인력 유입의 한 축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표 2-3 | 연령별 귀농·귀촌 현황(2011년)

단위 : 가구, %

구분	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가구 수	10,503	296	1,438	2,682	3,537	1,959	509	82
비율	100.0	2.8	13.7	25.5	33.7	18.7	4.8	0.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201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2011.

(4) 귀농자 주작목 현황

귀농자들의 주작목은 경종(벼, 배추 등 노지작물)이 3,448가구(5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과수 1,110가구(17.0%), 원예(시설작물 등) 858가구(13.1%), 축산 409가구(6.3%)순으로 나타났다. 귀농인이 경종 분야를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생산기술 습득이 어렵지 않고 초기 투자비용이 낮으며, 실패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4 | 귀농자 주작목 현황(2011년)

단위 : 가구, %

구분	계	경종	원예(시설)	과수	축산	기타
가구 수	6,541	3,448	858	1,110	409	716
비율	100.0	52.7	13.1	17.0	6.3	10.9

자료 : 농림수산물부, 2011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2011.

2) 귀농·귀촌 정책의 특성과 주요 내용

귀농·귀촌 정책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식량 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도시민들의 새로운 선택적 이주(selective immigration)라는 사회현상을 농림수산물부가 정책적으로 2009년 「귀농·귀촌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지금의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최근에는 도시민의 은퇴이후 삶의 대안으로써 귀농·귀촌이 부각되고 있다. 귀농·귀촌 정책은 도시민이나 취업을 위해 도시로 진출한 농업인들이 다시 회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공공기관(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 중앙정부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5개 사업(농산업 인턴제, 귀농교육 프로그램, 귀농인의 집,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신용보증 지원, 빈집수리비 지원)과 농촌정책국 3개 사업(전원마을 조성, 농어촌뉴타운 조성,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들은 교육훈련 지원, 사업기반 지원, 창업자금 및 컨설팅, 주택(빈집) 마련 지원, 홍보 등으로 대별된다.

이 사업들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이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추진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표 2-5 |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사업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농업정책국	농산업 인턴제	농업분야 창업 준비를 위한 영농 실습 지원
	귀농교육 프로그램	영농 기술 및 농업경영 교육
	귀농인의 집	일시 거주하면서 영농기술 습득, 주택·농지 준비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영농기반 또는 농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마련에 필요한 자금 지원, 컨설팅 지원
	신용보증 지원	담보능력이 미약한 귀농인의 채무 보증
	빈집수리비 지원	귀농가의 주택 마련 지원
농촌정책국	전원마을 조성	· 20호 이상의 농촌주단지 공급 · 신규 진입자에게 분양
	농어촌뉴타운조성	· 50호, 100호, 200호 규모의 농촌주택단지 공급 · 농업 및 농산업 분야 종사 예정자에게 분양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프로그램	· 귀농·귀촌 희망자에 대한 지역 홍보 ·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필요한 교육 등 연성적 프로그램 지원 · 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하드웨어 지원’을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연성적 지원 프로그램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기획 및 실행

자료 : 김정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16(3), 2009.

(2)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귀농·귀촌 관련 사업은 주로 농촌진흥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귀농교육 프로그램(오프라인), 귀농 관련 연구로 구별된다.

첫째,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일반 도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해서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며, 특히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교육훈련, 우수사례를 통한 시사점, 귀농을 위한 상담 등 폭넓은 정보 제공과 지원을 하고 있다.

둘째, 귀농교육 프로그램을 오프라인으로 운영함으로써 도시민, 탈북자, 제대 예정 군인, 정부부처 및 해경 등 퇴직예정 공무원, 출소 예정자 등 다양한 수요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셋째, 귀농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부부처, 지자체의 귀농·귀촌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표 2-6 | 공공기관(농촌진흥청)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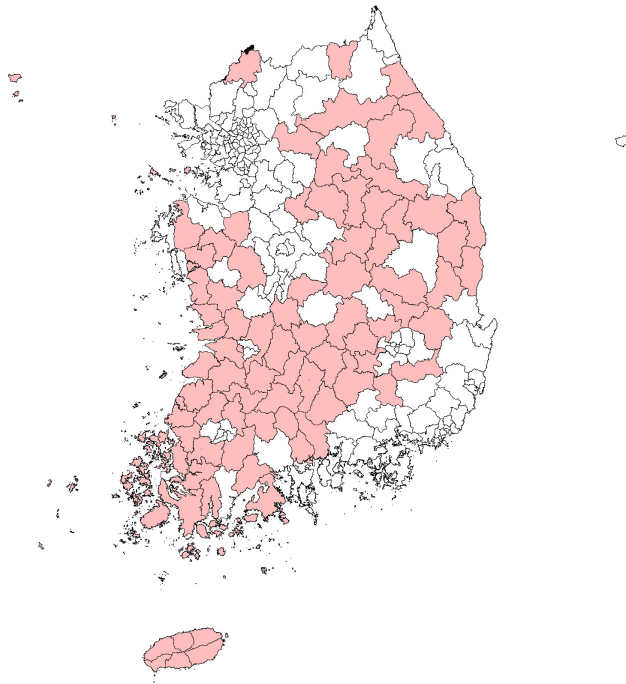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어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귀농인 실습지원 · 귀농 우수사례를 통한 홍보·확산 · 귀농 준비지원 및 상담
	귀농교육 프로그램 (오프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엘리트 귀농대학(귀농 희망 도시민) · 탈북자 귀농 · 제대 예정 군인 귀농 · 정부부처 및 해경 퇴직예정 공무원 귀농 · 출소예정자 취업 창업지원
	귀농 관련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퇴 귀농연구 · 귀농 승계가구 연구 · 한국형 가족농원 연구

자료 : www.returnfarm.com의 내용을 정리함

(3)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을 지역의 산업적 여건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귀농인의 정의, 지원규모 및 범위 등을 조례에서 정하고,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총 82개 지역으로 이 중 전남지역이 18개소, 경북지역 17개소, 전북지역 13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귀농·귀촌 사업은 정착지원금 지원, 교육훈련비, 의료비, 출산장려금, 이사비용, 주택알선과 수리비 지원, 농업발전기금 융자 지원, 사업지원(귀농정책을 위한 지원, 친환경 농업을 위한 지원,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등이 있으며, 사업은 지자체 재정 여건과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부록 1 참조).



〈그림 2-2〉 귀농·귀촌 지원 지자체 분포

(4) 민간기관

민간기관의 귀농·귀촌 지원은 크게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등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합숙형태의 교육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체계적인 귀농·귀촌 관련 교육은 (사)전국귀농운동본부에서 하고 있으며 생태귀농학교, 지역귀농학교, 귀농통문 발간 등을 통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지역귀농학교는 부산, 전남 등 주요 지역별로 귀농학교를 운영함으로써 인적, 교육프로그램 등 네트워크화를 통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 외에도 전국농업기술자협회나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에서도 귀농 관련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7 | 민간기관 단위의 귀농·귀촌 관련 사업

구분	사업명	주요 내용
(사)전국귀농운동본부	생태귀농학교 운영	
	지역귀농학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귀농학교 · 광주전남 귀농학교 · 경남귀농학교 · 순창 귀농학교 · 화천 현장귀농학교 · 지창 귀농학교 · 기독교 귀농학교 · 대구 귀농학교 · 대전 귀농학교
	귀농통문 책자 발간	· 귀농 관련 계간지 발간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도시민 웰빙농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교육 · 도시민 생활농업 교육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E-tutor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귀농교육 · 오프라인 귀농교육 · 합숙형 귀농교육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2011의 내용을 재정리함

3. 귀어·귀촌의 실태 및 정책

1) 귀어·귀촌의 실태

귀어·귀촌의 실태는 2010~2011년까지 최근 2년간 추진되었던 귀어·귀촌 정책지원사업 실적이 유일한 자료로 추진 실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하였다.

(1) 업종별 귀어·귀촌 현황

전체 귀어가의 60% 정도가 양식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선어업, 종묘생산, 가공, 어촌 비즈니스(펜션 포함)순으로 나타났다. 양식어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는 어선어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강도가 낮고, 전문성·진입장벽에서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복, 해삼 등 양식어업이 최근 높은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8 | 업종별 귀어 현황(2010~2011년)

단위 : 가구, %

구 분	양식어업	어선어업	종묘생산	가공	어촌 비즈니스 (펜션 포함)	계
2010년 (비율)	32 (59.3)	14 (25.9)	4 (7.4)	2 (3.7)	2 (3.7)	54 (100.0)
2011년 (비율)	18 (62.1)	10 (34.5)	1 (3.4)	-	-	29 (100.0)

자료 : 농림수산물부 수산개발과 내부자료

(2) 지역별 귀어·귀촌 현황

전체 귀어 정책지원대상자의 50% 이상이 전남지역으로 귀어하였으며,

전북, 경남순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많은 귀어인이 전남지역을 선호하는 유는 <표 2-8>의 업종별 귀어 현황에서 양식어업의 비중이 높은 이유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즉 전남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양식어업(전북, 해삼)이 발달해 있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특히 2011년 지역별 귀어 현황을 보면 전체 귀어인 가운데 76%가 전남지역으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 표 2-9 | 지역별 귀어 현황(2010~2011년)

단위 : 가구, %

구 분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계
2010년 (비율)	2 (3.7)	4 (7.4)	2 (3.7)	9 (16.7)	29 (51.9)	8 (16.7)	54 (100.0)
2011년 (비율)	1 (3.4)	1 (3.4)	3 (10.3)	-	22 (75.9)	2 (6.9)	29 (10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수산개발과 내부자료

2) 귀어·귀촌 정책의 특성과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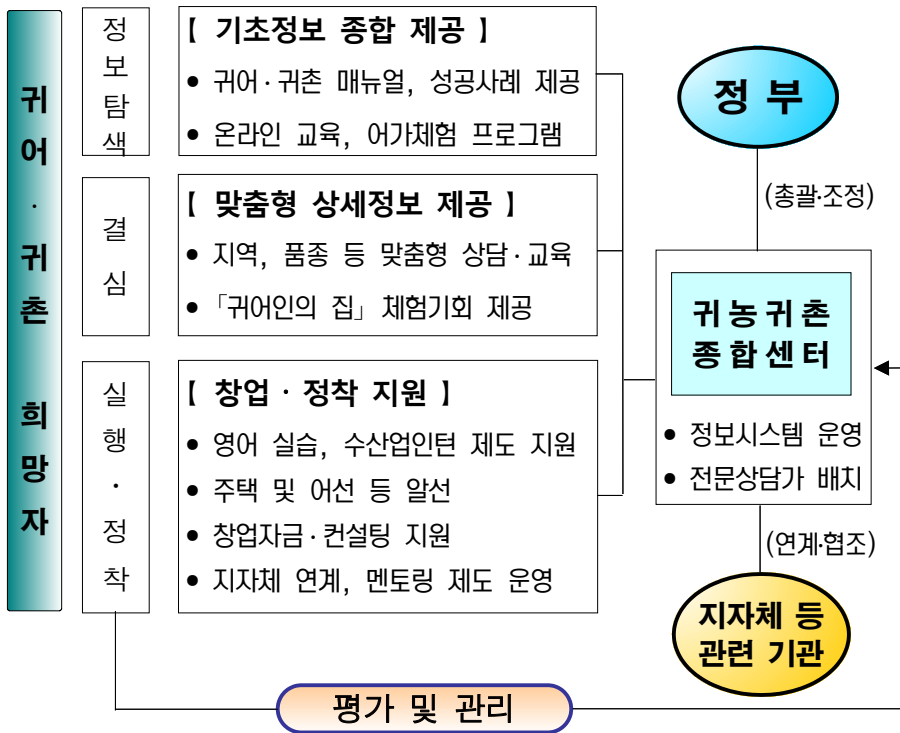
귀어·귀촌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먼저 귀농·귀촌 종합대책이 이루어지면서 이후 귀어·귀촌에 대한 지원방안을 추가로 반영하여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1) 귀어·귀촌 정책지원의 프로세스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귀어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사전에 귀어 시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영어에 대한 실습, 창업자금 및 주택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나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귀어·귀촌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귀어·귀촌종합센터를 마련하지 못했으며, 또한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귀어·귀촌 희망자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와 멘토링과 같은 사후적 관리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반면 귀어인 수산업창업과 주택구입 사업지원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수산인력개발센터에서 귀어가 어촌정착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그림 2-3 | 귀어·귀촌 지원 프로세스

(2) 귀어인 수산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업창업 및 주거공간 지원을 통해 어촌지역에 새로운 신규인력 유입과 우수인력을 후계인력으로 육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원사업 내용은 크게 수산 분야, 어촌비즈니스, 주택 마련으로 구별되며,

수산 분야와 어촌 비즈니스사업은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수산 분야는 어선, 양식, 수산물가공, 소금업 등에서 부지, 시설 구입, 종묘입식,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지원이 가능하며, 어촌 비즈니스는 어촌관광 관련 건축과 부지 구입, 기반시설을 포함한다.

또한 귀어·귀촌 시 필요한 주택은 농어가주택으로 한정하고, 세대당 면적도 150㎡ 이하로 제한하였다.

【표 2-10】 귀어인 수산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구분	소구분	사업 내용
수산 분야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 (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의 50% 이내) · 어선·양식장·염전 구입 · 양식장·어선·가공·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 개보수 ·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 저장시설의 설치 · 수산장비, 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어촌 비즈니스	어촌관광 어촌레스토랑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구입(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 펜션, 민박, 어촌레스토랑 건축 · 어촌 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
주택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용자 지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

이 사업은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시도) → 수산업 창업 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도 수산사무소, 수협) → 지원대상자 선정·보고(수산사무소) → 시도별 사업량 배정(농식품부) → 지원대상자 확정·보고·통보(수산사무소)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질적확인(수산사무소) → 자금대출(수협) → 사후관리(귀어인)순으로 추진된다.

제3장 귀어·귀촌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최근 도시를 떠나 어촌에 귀촌을 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는 귀어인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귀어인의 증대는 고령화된 어가에 젊은 인력이 유입되어 향후 어업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본 조사는 도시민과 귀어인을 대상으로 귀촌, 귀어에 대한 인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귀어인의 확대 및 어업 종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실시하였다.

1) 조사설계

본 설문조사의 대상을 살펴보면 도시민은 전국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30~50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귀어인은 현재 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다. 표본 수는 도시민 400명과 귀어인 중 정부 지원 귀어인은 29명,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귀어인 18명으로 총 447개의 유효 표본으로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온라인조사와 전화조사, 면접조사를 병행하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표 3-1 | 조사설계 내용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 : 전국 6대 광역시 거주 30~50대 도시민 · 귀어인 : 현재 귀어하여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표 본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 : 400명(표본 오차는 $\pm 4.9\%P$) · 정부 지원 귀어인 : 29명 · 정부 미지원 귀어인 : 18명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 :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 · 정부 지원 귀어인 : CATI(Computer Assisted Telephone Interview) · 정부 미지원 귀어인 : 면접조사
표본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 : 연령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30대 20%, 40대 30%, 50대 50%로 할당 · 귀어인 : 유의 표본 추출 (Purposive Sampling)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민 : 9월 19일~26일 · 정부 지원 귀어인 : 9월 19일~10월 5일 · 정부 미지원 귀어인 : 11월 5일~11월 16일

2) 도시민 응답자의 특성

도시민 응답자는 총 400명으로 거주 지역별로 서울이 가장 많은 187명, 울산이 21명으로 가장 적다. 남성이 236명, 여성이 164명으로 남성이 다소 많았으며 출신지역은 약 60%가 도시, 40%가 비도시 지역이며 이 중 어촌은 21명(5.3%)이었다.

학력은 약 73%가 대졸이었으며 가장 많은 직업은 사무직으로 약 45%였고, 소득은 4,000만원을 기준으로 분포되나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약 19%를 차지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거주지역, 연령, 성별, 출신지, 가구원 수, 학력, 직업, 소득, 귀촌 고려지역, 어업종사 의향 등이 있으나 분석결과에서는 응답내용 중 유의미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제시하였다.

| 표 3-2 | 도시민 응답자의 특성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400	100.0%
거주지별	서울	187	46.8%
	부산	68	17.0%
	광주	28	7.0%
	대구	44	11.0%
	인천	52	13.0%
	울산	21	5.3%
연령	30대	80	20.0%
	40대	120	30.0%
	50대	200	50.0%
성별	남성	236	59.0%
	여성	164	41.0%
출신지	농촌	136	34.0%
	어촌	21	5.3%
	산촌	5	1.3%
	도시	238	59.5%
가구원 수	1~2명	43	10.8%
	3명	116	29.0%
	4명	186	46.5%
	5명 이상	55	13.8%
학력	고졸 이하	74	18.5%
	대졸	291	72.8%
	대학원 이상	35	8.8%
직업	자영업	71	17.8%
	사무직	178	44.5%
	영업직	14	3.5%
	공무원	22	5.5%
	주부	86	21.5%
	퇴직/휴직/기타	29	7.3%
소득	2,000만 원 이하	32	8.0%
	3,000만 원대	71	17.8%
	4,000만 원대	81	20.3%
	5,000만 원대	72	18.0%
	6,000만 원대	69	17.3%
	7,000만 원 이상	75	18.8%
귀촌 고려지역	농촌	289	72.3%
	어촌	28	7.0%
	산촌	83	20.8%
어업종사 의향	예	99	24.8%
	아니오	301	75.3%

3) 정부 지원 귀어인 응답자의 특성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 응답자는 총 29명이었다. 귀어 이전 거주지는 수도권이 가장 많았으며 강원권이 가장 적었다. 또한 귀어 이전 직업을 살펴보면 블루칼라가 약 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질문의 내용에는 귀어 유형, 어업종사 유형, 연령 등이 있으나 분석결과에서는 귀어유형에 따라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표 3-3 | 응답자의 특성(정부 지원)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
전체		29	100.0%
귀어유형	I턴	7	24.1%
	U턴	20	69.0%
	J턴	2	6.9%
어업종사유형	전업	24	82.8%
	겸업(반농반어)	5	17.2%
어업종사업종	어선어업	10	34.5%
	양식어업	16	55.2%
	수산물 유통/가공	2	6.9%
	기타	1	3.4%
성별	남성	28	96.6%
	여성	1	3.4%
연령	20~30대	10	34.5%
	40대	9	31.0%
	50대	10	34.5%
귀어 전 직업	자영업	5	17.2%
	블루칼라	22	75.9%
	화이트칼라	2	6.9%
귀어 이전 거주지	수도권	16	55.2%
	강원권	1	3.4%
	충청권	3	10.3%
	전라/제주권	6	20.7%
	경상권	3	10.3%
귀어 이후 거주지	수도권	1	3.4%
	충청권	5	17.2%
	전라/제주권	22	75.9%
	경상권	1	3.4%

4) 정부 미지원 귀어인 응답자의 특성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귀어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답자는 총 18명으로 경기도 화성시 백미리 어촌계원 중 귀어인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귀어유형은 I턴이 11명으로 U턴 7명에 비해 많았으며 어촌관광업을 중심으로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을 하고 있었다. 귀어 이전 직업은 대다수가 회사원으로 응답하였으며 자영업이 소수 있었다.

| 표 3-4 | 응답자의 특성(정부 미지원)

단위 : 명, %

구분		사례 수	%
전 체		18	100%
귀 어 유 형	I턴	11	61.1%
	U턴	7	38.9%
어업종사유형	전업	6	33.3%
	겸업(반농반어)	8	44.4%
	기타	4	22.2%
어업종사업종	어선어업	3	15.0%
	양식어업	5	25.0%
	어촌관광업	8	40.0%
	수산물 유통/가공	3	15.0%
	기타	1	5.0%
성 별	남성	11	61.1%
	여성	7	38.9%
연 령	20~30대	4	22.2%
	40대	7	38.9%
	50대	7	38.9%
귀어 전 직업	자영업	3	23.1%
	블루칼라	1	7.7%
	화이트칼라	9	69.2%

2. 도시민 설문분석 결과

1) 귀촌 의향

(1) 귀촌 고려지역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촌 고려지역에 대해 설문하기 위해 농촌, 산촌, 어촌으로 구분하여 ‘어떠한 형태의 귀촌을 선호하고 있는가?’를 질문하였다.

설문의 결과 ‘농촌’이라는 응답이 72.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산촌’ 20.8%, ‘어촌’ 7.0%로 응답자 100명 중 72명 정도가 농촌지역으로 귀촌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반면 ‘어촌’이라는 응답자는 100명 중 7명 정도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어촌’이라는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어촌은 연령이 낮을수록(30대 10.0%) 응답율이 높았으며, 농촌은 학력이 낮을수록(고졸 이하 75.7%) 선호하는 반면 어촌은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 이상 11.4%) 높게 나타났다.

| 표 3-5 | 귀촌 고려지역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농 촌	어 촌	산 촌
전 체		(400)	72.3	7.0	20.8
연령	30대	(80)	73.8	10.0	16.3
	40대	(120)	71.7	9.2	19.2
	50대	(200)	72.0	4.5	23.5
성별	남성	(236)	67.8	8.5	23.7
	여성	(164)	78.7	4.9	16.5
가족인원	1~2명	(43)	69.8	9.3	20.9
	3명	(116)	71.6	10.3	18.1
	4명	(186)	75.8	5.4	18.8
	5명 이상	(55)	63.6	3.6	32.7
학력	고졸이하	(74)	75.7	4.1	20.3
	대졸	(291)	73.5	7.2	19.2
	대학원 이상	(35)	54.3	11.4	34.3

(2) 귀촌 계획시기

언제쯤 귀촌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6~10년 후’라는 응답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11~15년 후’ 20.3%, ‘2~5년 후’ 13.8%, ‘16~20년 후’ 11.8%, ‘21년 이후’ 5.0%, ‘1년 후’ 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6~15년 이후’에 귀촌할 계획인 것으로 응답하였다.

| 표 3-6 | 귀촌 계획시기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1년 후	2~5년 후	6~10년 후	11~15년 후	16~20년 후	21년 이후	미정
전 체		(400)	1.3	13.8	33.3	20.3	11.8	5.0	14.8
연령	30대	(80)	1.3	6.3	12.5	18.8	26.3	15.0	20.0
	40대	(120)	0.8	6.7	26.7	29.2	15.0	5.8	15.8
	50대	(200)	1.5	21.0	45.5	15.5	4.0	0.5	12.0
학력	고졸 이하	(74)	0.0	13.5	43.2	20.3	5.4	1.4	16.2
	대졸	(291)	1.4	14.4	30.6	19.6	13.4	6.2	14.4
	대학원 이상	(35)	2.9	8.6	34.3	25.7	11.4	2.9	14.3
직업	자영업	(71)	2.8	18.3	36.6	21.1	7.0	2.8	11.3
	사무직	(178)	0.6	9.0	31.5	21.3	18.0	6.2	13.5
	영업직	(14)	0.0	21.4	35.7	28.6	7.1	0.0	7.1
	공무원	(22)	0.0	13.6	31.8	31.8	13.6	4.5	4.5
	주부	(86)	2.3	12.8	36.0	14.0	5.8	7.0	22.1
	퇴직/휴직/기타	(29)	0.0	31.0	27.6	17.2	3.4	0.0	20.7
소득	2,000만 원 이하	(32)	3.1	15.6	28.1	9.4	9.4	0.0	34.4
	3,000만 원대	(71)	4.2	11.3	32.4	15.5	9.9	4.2	22.5
	4,000만 원대	(81)	0.0	12.3	24.7	25.9	18.5	2.5	16.0
	5,000만 원대	(72)	0.0	19.4	33.3	23.6	9.7	4.2	9.7
	6,000만 원대	(69)	1.4	14.5	37.7	20.3	5.8	10.1	10.1
	7,000만 원 이상	(75)	0.0	10.7	41.3	20.0	14.7	6.7	6.7

연령이 높을수록 귀촌계획시기가 앞당겨지며 30대는 ‘16~20년 후’(26.3%), 40대는 ‘11~15년 후’(29.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는 ‘6~10년 후’(45.5%)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55세 이후로 귀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어촌이주 동기

어촌으로 이주하려는 동기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퇴직 후 여생을 위해’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후 여생을 위해 어촌이주를 하려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17.0%, ‘이상추구/인간다운 삶을 위해’ 16.0%, ‘도시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7.5%,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1.5%, ‘사업실패/실직/미취업’ 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질문 결과 어촌지역으로 귀촌의 의미가 강한 것으로 귀촌 이후 농업과 어업 등에 종사하는 생계를 위한 귀촌이 아닌 안정된 생활을 위한 귀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 이상: 62.9%)응답률이 높았으며 영업직(78.6%)과 공무원(68.2%) 및 연 소득 6,000만원 대(71.0%) 및 7,000만원 이상(62.7%) 등에서 특히 높았다.

반면 30대는 ‘이상추구/인간다운 삶을 위해’이라는 응답(21.3%)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젊은 연령층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응답으로 판단된다.

| 표 3-7 | 어촌이주 동기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퇴직 후 여생을 위해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이상추구/ 인간다운 삶을 위해	도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사업실패/ 실직/ 미취업
전 체		(400)	57.5	17.0	16.0	7.5	1.5	0.3
연령	30대	(80)	47.5	18.8	21.3	7.5	5.0	0.0
	40대	(120)	62.5	10.8	16.7	8.3	0.8	0.0
	50대	(200)	58.5	20.0	13.5	7.0	0.5	0.5
학력	고졸 이하	(74)	52.7	21.6	9.5	10.8	4.1	1.4
	대졸	(291)	58.1	16.2	17.9	6.5	1.0	0.0
	대학원 이상	(35)	62.9	14.3	14.3	8.6	0.0	0.0
직업	자영업	(71)	52.1	18.3	19.7	9.9	0.0	0.0
	사무직	(178)	65.7	11.2	14.6	6.7	1.1	0.0
	영업직	(14)	78.6	7.1	7.1	0.0	7.1	0.0
	공무원	(22)	68.2	4.5	9.1	13.6	4.5	0.0
	주부	(86)	48.8	29.1	15.1	5.8	1.2	0.0
	퇴직/휴직/기타	(29)	27.6	27.6	27.6	10.3	3.4	3.4
소득	2,000만 원 이하	(32)	37.5	18.8	18.8	15.6	6.3	3.1
	3,000만 원대	(71)	46.5	25.4	16.9	9.9	1.4	0.0
	4,000만 원대	(81)	56.8	9.9	21.0	8.6	2.5	0.0
	5,000만 원대	(72)	59.7	15.3	22.2	2.8	0.0	0.0
	6,000만 원대	(69)	71.0	18.8	4.3	5.8	0.0	0.0
	7,000만 원 이상	(75)	62.7	16.0	13.3	6.7	1.3	0.0

2) 귀어 의향

(1) 어업종사 의향

귀촌 의향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어촌어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아니오’(의향 없음)라는 응답이 75.3%, ‘예’(의향 있음)라는 응답이 24.7%로 나타났다. 이는 귀촌인구의 약 25%정도가 어업종사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어업행위에 대한 응답은 여성(83.5%), 주부(86.0%) 등에서 상대적으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3-8 | 어업종사 의향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예	아니오
전 체		(400)	24.8	75.3
성별	남성	(236)	30.5	69.5
	여성	(164)	16.5	83.5
가구원 수	1~2명	(43)	32.6	67.4
	3명	(116)	25.0	75.0
	4명	(186)	25.3	74.7
	5명 이상	(55)	16.4	83.6
직업	자영업	(71)	38.0	62.0
	사무직	(178)	25.3	74.7
	영업직	(14)	28.6	71.4
	공무원	(22)	18.2	81.8
	주부	(86)	14.0	86.0
	퇴직/휴직/기타	(29)	24.1	75.9

(2) 귀어 시 고려 업종

어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N=99)를 대상으로 귀어 시, 어떠한 업종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어촌관광업’이라는 응답이 5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 연령대에서 50%가 넘는 응답자가 관광업을 고려하고 있어 귀어시 어업행위보다는 관광 관련 업종으로 귀어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어업 관련으로는 ‘양식어업’ 31.3%, ‘수산물 유통·가공업’ 14.1%로 비교적 높았다. ‘어선어업’은 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표 3-9 | 귀어 시 고려 업종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어촌관광업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 가공업	어선어업
전 체		(99)	51.5	31.3	14.1	3.0
거주지별	서울	(48)	60.4	22.9	12.5	4.2
	부산	(21)	33.3	47.6	14.3	4.8
	광주	(7)	42.9	57.1	0.0	0.0
	대구	(7)	57.1	28.6	14.3	0.0
	인천	(10)	40.0	30.0	30.0	0.0
	울산	(6)	66.7	16.7	16.7	0.0
연령	30대	(25)	52.0	32.0	16.0	0.0
	40대	(27)	51.9	33.3	7.4	7.4
	50대	(47)	51.1	29.8	17.0	2.1
학력	고졸 이하	(18)	27.8	44.4	22.2	5.6
	대졸	(71)	56.3	26.8	14.1	2.8
	대학원 이상	(10)	60.0	40.0	0.0	0.0
소득	2,000만 원 이하	(8)	50.0	37.5	12.5	0.0
	3,000만 원대	(19)	36.8	31.6	21.1	10.5
	4,000만 원대	(18)	55.6	16.7	27.8	0.0
	5,000만 원대	(23)	43.5	43.5	8.7	4.3
	6,000만 원대	(15)	66.7	26.7	6.7	0.0
	7,000만 원 이상	(16)	62.5	31.3	6.3	0.0

(3) 수산계 교육과정 이수 여부

어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N=99)를 대상으로 수산계 교육과정 이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88.9%로 나타나, 응답자의 대부분이 수산계 교육과정 이수를 하지 않았다.

수산계 교육과정 이수를 한 응답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구 거주자(28.6%), 인천거주자(20.0%), 연령이 높을수록(50대 14.9%), 여성(18.5%) 등에서 특히 높았다.

표 3-10 | 수산계 교육과정 이수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예	아니오
전 체		(99)	11.1	88.9
거주지별	서울	(48)	6.3	93.8
	부산	(21)	19.0	81.0
	광주	(7)	0.0	100.0
	대구	(7)	28.6	71.4
	인천	(10)	20.0	80.0
	울산	(6)	0.0	100.0
연령	30대	(25)	4.0	96.0
	40대	(27)	11.1	88.9
	50대	(47)	14.9	85.1
성별	남성	(72)	8.3	91.7
	여성	(27)	18.5	81.5

(4) 수산업 종사 경험 여부

어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N=99)를 대상으로 수산업에 종사한 경험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아니오’라는 응답이 78.8%, ‘예’라는 응답

이 21.2%로 나타났다.

‘예’라는 응답은 인천 거주자(30.0%), 학력이 낮을수록(고졸 이하 33.3%), 주부(41.7%) 등에서 특히 높고, ‘아니오’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대학원 이상 90.0%)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3-11 | 수산업 종사 경험 여부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예	아니오
전 체		(99)	21.2	78.8
거주지별	서울	(48)	20.8	79.2
	부산	(21)	23.8	76.2
	광주	(7)	14.3	85.7
	대구	(7)	14.3	85.7
	인천	(10)	30.0	70.0
	울산	(6)	16.7	83.3
학력	고졸 이하	(18)	33.3	66.7
	대졸	(71)	19.7	80.3
	대학원 이상	(10)	10.0	90.0
직업	자영업	(27)	18.5	81.5
	사무직	(45)	17.8	82.2
	영업직	(4)	25.0	75.0
	공무원	(4)	25.0	75.0
	주부	(12)	41.7	58.3
	퇴직/휴직/기타	(7)	14.3	85.7

(5) 수산업 종사 분야

수산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N=21)를 대상으로 종사 수산업 분야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수산물 유통 및 판매’ 관련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이 42.9%로 가장 많은 한편 어획 경험이 있는 사람은 19.0%, 양식 경험이 있는 사람은 23.8%였다.

| 표 3-12 | 수산업 종사 분야

단위 : 명, %

분야	세부 직업	사례 수	비율(%)
수산물 유통/판매	도매	1	4.8
	수산물시장	1	4.8
	수산물유통	2	9.5
	어시장 경매	1	4.8
	유통 판매업	1	4.8
	유통업	1	4.8
	판매	2	9.5
	합계	9	42.9
어획	굴캐기	1	4.8
	김	1	4.8
	낙시배 근무	1	4.8
	선원생활 함	1	4.8
	합계	4	19.0
양식	양식	2	9.5
	양식어업	1	4.8
	양식업	1	4.8
	양식장	1	4.8
	합계	5	23.8
식당	횃집운영	1	4.8
	횃집기사	1	4.8
	합계	2	9.6
일반회사	수산업회사에 근무	1	4.8
합 계		21	100

3) 귀어 준비

(1) 귀어 준비 경로

어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N=99)를 대상으로 귀어 준비 경로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해당 지자체 귀어·귀촌지원사업’이라는 응답이 39.4%,

‘농림수산식품부 귀어귀촌 정책지원사업’이라는 응답이 27.3%로 나타난 반면 ‘스스로’ 17.2%, ‘부모, 친지 등 가족, 친구 등을 통해’ 16.2%로 나타났다.

‘해당 지자체 귀어·귀촌지원사업’이라는 응답은 서울 거주자(52.1%), 50대(46.8%), 대학원 이상(50.0%), 공무원(75.0%), 연 소득 7,000만원 이상(56.3%) 등에서 특히 높았으며 ‘농림수산식품부 귀어귀촌 정책지원사업’이라는 응답은 부산 거주자(42.9%), 고졸 이하(44.4%), 영업직(50.0%), 연 소득 3,000만원 대(47.4%)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3-13 | 귀어 준비 경로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해당 지자체 귀어·귀촌 지원사업	농림수산식품부 귀어·귀촌 정책지원사업	스스로	부모, 친지 등 가족, 친구 등을 통해
전 체		(99)	39.4	27.3	17.2	16.2
거주지 별	서울	(48)	52.1	22.9	10.4	14.6
	부산	(21)	28.6	42.9	9.5	19.0
	광주	(7)	42.9	28.6	14.3	14.3
	대구	(7)	14.3	28.6	57.1	0.0
	인천	(10)	10.0	30.0	20.0	40.0
	울산	(6)	50.0	0.0	50.0	0.0
연령	30대	(25)	40.0	32.0	20.0	8.0
	40대	(27)	25.9	25.9	18.5	29.6
	50대	(47)	46.8	25.5	14.9	12.8
학력	고졸 이하	(18)	38.9	44.4	5.6	11.1
	대졸	(71)	38.0	25.4	18.3	18.3
	대학원 이상	(10)	50.0	10.0	30.0	10.0

(2) 귀어 준비 시 어려움

어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응답자(N=99)를 대상으로 귀어 준비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초기 투자 자금’이 35.4%, ‘귀어정보

부족' 27.3%로 나타났다. 귀농에 비해 귀어지원 정책과 관련한 정보를 접하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 준비 시 어려움으로 어촌계/수산업의 진입장벽이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에 앞서 귀어를 시작하기 위한 초기투자금과 귀어정보와 같은 1차적 문제가 더 부각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응답한 귀어 의향자 중 대다수가 관광업을 위주로 하는 귀어를 고려하고 있어 실질적인 어업행위와 관련된 부분의 응답은 낮게 나타났다.

표 3-14 | 귀어 준비 시 어려움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초기 투자 자금	귀어 정보 부족	어업 관련 기술 지도	마을 분위기 적응/관계형성	여가, 문화, 의료복지 환경	자녀 교육	어촌계/수산업 진입장벽
전 체		(99)	35.4	27.3	17.2	10.1	5.1	3.0	2.0
거주지별	서울	(48)	29.2	33.3	14.6	18.8	0.0	2.1	2.1
	부산	(21)	33.3	28.6	19.0	4.8	4.8	4.8	4.8
	광주	(7)	57.1	14.3	0.0	0.0	14.3	14.3	0.0
	대구	(7)	28.6	28.6	14.3	0.0	28.6	0.0	0.0
	인천	(10)	60.0	0.0	30.0	0.0	10.0	0.0	0.0
	울산	(6)	33.3	33.3	33.3	0.0	0.0	0.0	0.0
연령	30대	(25)	44.0	32.0	16.0	4.0	4.0	0.0	0.0
	40대	(27)	37.0	25.9	3.7	18.5	0.0	11.1	3.7
	50대	(47)	29.8	25.5	25.5	8.5	8.5	0.0	2.1

(3) 귀어를 위한 정부의 시행 정책

귀어를 위해 정부 등이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책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어촌정착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이 36.4%, '귀어 정책자금 지원사업'이 33.3%, '어업기술 및 교육 관련 지원사업'이라는 응답이 27.3%로

나타났다. 반면 ‘귀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이라는 응답이 3.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귀어 준비 시 어려움에 있어 초기투자자금과 더불어 귀어 관련 정보제공이 높게 나타났으나 귀어를 위한 정부의 시행정책에서 귀어 관련 정보제공은 3%의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에 비해 어촌정착을 위한 컨설팅 사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귀어관련 정보제공과 같은 소극적 정책보다는 컨설팅 사업 등의 적극적 사업을 정부가 시행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귀어 시 어려움에 있어 초기투자 자금의 부족에 따라 귀어정책자금 지원사업이 우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 표 3-15 | 귀어를 위한 정부의 시행 정책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어촌정착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	귀어 정책자금 지원사업	어업기술 및 교육 관련 지원사업	귀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전 체		(99)	36.4	33.3	27.3	3.0
거주 지별	서울	(48)	33.3	31.3	31.3	4.2
	부산	(21)	38.1	19.0	38.1	4.8
	광주	(7)	28.6	57.1	14.3	0.0
	대구	(7)	42.9	42.9	14.3	0.0
	인천	(10)	40.0	40.0	20.0	0.0
	울산	(6)	50.0	50.0	0.0	0.0
연령	30대	(25)	40.0	36.0	24.0	0.0
	40대	(27)	44.4	33.3	18.5	3.7
	50대	(47)	29.8	31.9	34.0	4.3

4) 도시민 설문분석 결과 종합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어·귀촌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도시민이 고려하고 있는 귀촌의 형태를 알아보았다. 설문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농촌과 산촌 그리고 어촌으로 구분하여 선택하게 하였다. 지형적으로 농·산·어촌을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도시민들의 단순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의 결과는 농촌과 산촌에 비해 어촌의 선택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 400명 중 7%인 28명이 어촌을 선택하였다. 농촌이 72.3% 약 290명인 것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산촌이 80명인 것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로 어촌에 대한 귀촌인식이 매우 낮았다.

도시민들은 귀촌지역을 여전히 농촌중심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귀촌과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농촌을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대중매체 또한 농촌을 중심으로 귀촌과 귀농을 다루고 있다. 이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농촌을 중심으로 귀촌을 인식하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어촌으로 귀촌하고자 하는 도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귀어를 할 의향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4.7%인 99명이 어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명 중 3명은 어촌으로의 귀촌은 고려하나 어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결과를 보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업행위 중 어촌관광업의 선택이 51% 정도로 높게 나타나 실질적인 어선어업과 양식어업 등 직접적 어업의 비중은 400명 중 34명인 8.5%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특히 어선어업은 3%로, 관광과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 가공 등에 비해 어선어업의 비율이 낮은 이유는 어선의 구입비용과 운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어촌으로 귀촌을 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지역적 선택과 귀촌 이후 귀어 연계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어촌이주의 동기와 어촌으로의 이주시기를 살펴보면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먼저 어촌이주의 동기를 살펴보면 퇴직 후 여생을 위해라는 답변이 약 60%로 나타났으며, 어촌이주의 시기 또한 이와 비슷한 55세 전후로 나타났

다. 어촌으로의 귀촌이 실질적인 어업행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귀어 준비를 위한 초기투자자금과 귀어정보 부족은 귀어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귀어 이후 어촌정착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업무가 요구되고 있었다.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귀어와 젊은 층의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귀촌인과 귀어인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귀농에 비해 귀어라는 단어가 대중에게 여전히 생소한 단어로 인식되고 있다. 귀어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귀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귀어인 설문분석 결과

1) 귀어 현황

(1) 귀어형태와 어업종사 유형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의 귀어 형태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U턴’이라는 응답이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I턴’ 24.1%, ‘J턴’ 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하는 어업 유형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업’이라는 응답은 82.8%, ‘겸업’이라는 응답은 17.2%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전업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29명 중 22명 정도가 어촌에서 도시로 갔다가 다시 어촌으로 되돌아가는 형태의 귀어인으로 과거 어촌의 경험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U턴이 집중적으로 많은 것은 어촌지역의 배타성이 귀어현상에서도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16 | 귀어형태와 어업종사 유형(정부 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전업	겸업
전 체		(29)	82.8	17.2
귀어유형	I턴	(7)	100.0	0.0
	U턴	(20)	80.0	20.0
	J턴	(2)	50.0	50.0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귀어인의 귀어 형태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I턴’이라는 응답이 61.1%, ‘U턴’ 38.9%였으며 ‘J턴’은 없었다. 어업 관련하여 종사하는 어업 유형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업’이라는 응답은 33.3%, ‘겸업’이라는 응답은 44.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의 형태와는 다르게 I턴 귀어인이 많은 것은 지역적 특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된다. 본 설문이 진행된 화성시 백미리 어촌계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어촌으로 이주하는 이주민들이 어촌계원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어촌계원으로 등록하는 진입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계원으로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표 3-17 | 귀어형태와 어업종사 유형(정부 미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전업	겸업	기타
전 체		(18)	33.3	44.4	22.2
귀어유형	I턴	(11)	36.4	27.3	36.4
	U턴	(7)	28.6	71.4	0

(2) 종사 업종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이 종사하는 어업 업종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양식어업’이라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어선어업’ 34.5%, ‘수산물 유통·가공업’ 6.9%, ‘기타’ 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8】 종사 업종(정부 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양식어업	어선어업	수산물 유통·가공업	기타
전체		(29)	55.2	34.5	6.9	3.4
귀어 유형	I턴	(7)	28.6	71.4	0.0	0.0
	U턴	(20)	70.0	20.0	5.0	5.0
	J턴	(2)	0.0	50.0	50.0	0.0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어촌관광업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양식업 25%, 어선어업 15%, 수산물 유통이 15%였다. 어촌관광업은 I턴 귀어인이 27.3%에 비해 U턴 귀어인이 55.6%로 높게 나타났다.

【표 3-19】 종사 업종(정부 미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어촌관광업	양식업	어선어업	수산물 유통	기타
전체		(20)	40.0	25.0	15.0	15.0	5.0
귀어 유형	I턴	(11)	27.3	27.3	18.2	27.3	0
	U턴	(9)	55.6	22.2	11.1	0	11.1

(3) 업종 선택 이유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이 업종을 선택한 이유로는 어업의 전망이 좋아서 선택한 경우가 44.8%로 가장 많고, 그다음에 가족 또는 지인의 영향에

의한 선택이 34.5%로 나타났다. 그 밖에, 어업 경험이 있어서 선택한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선호 때문에 선택한 경우도 있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적인 특성이 작용하여 어촌에 머물러 있거나 어촌과 관계된 가족, 지인들의 영향으로 인한 사례와 어업의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 또한 가족, 지인의 영향으로 볼 때 어업의 전망 또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면 개인적 선호와 양식업 적합 등은 개인적인 특성과 결정에 의한 것으로 지역의 영향은 매우 적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3-20】 업종 선택 이유(정부 지원)

단위 : 명, %

분야	사례 수	비율(%)
가족 및 지인의 영향	10	34.5
경험 있음	2	6.8
어업의 전망	13	44.8
개인적 선호	4	13.8
양식업 적합	2	6.8
합 계	29	100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귀어인이 업종을 선택한 이유를 질문하였지만, 업종의 선택 이유를 서술하지 않고, 귀어의 선택 이유를 서술하였다. 이로 보아 귀어 시의 업종 선택을 미리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어촌계 가입을 전제로 귀어에 관심을 갖고, 귀촌 후에 자신의 업종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3-21 | 업종 선택 이유(정부 미지원)

단위 : 명, %

분야	사례 수	비율(%)
노후대책	2	25
건강상의 문제	2	25
도시생활의 어려움	2	25
어업환경	1	12.5
귀향	1	12.5
합 계	8	100

(4) 귀어 전후 연평균 소득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의 귀어 전과 후의 연간 평균소득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귀어 전 소득’은 평균 3,896만 원, ‘귀어 후 소득’은 평균 2,610만 원으로 나타나, 귀어 전보다 귀어 후에 소득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유형에 따른 차이가 극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I턴은 소득이 약 15% 증가한 것에 비해 U턴은 소득이 약 7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I턴의 경우 귀어를 위한 준비과정 또는 체계적 교육과 같은 다른 요인들이 작용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된다.

| 표 3-22 | 귀어 전후 연평균 소득(정부 지원)

단위 : 명, 만 원

구 분		사례 수	귀어 전 소득	귀어 후 소득
전 체		(29)	3,896.00	2,610.00
귀어유형	I턴	(7)	3,271.43	4,900.00
	U턴	(20)	4,156.25	1,669.23
	J턴	(2)	4,000.00	3,000.00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귀어인은 ‘귀어 전 소득’은 평균 2,575만 원, ‘귀어 후 소득’은 평균 2,868.8만 원으로 나타나, 귀어 전보다 귀어 후에 소득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I턴과 U턴의 차이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3 | 귀어 전후 연평균 소득(정부 미지원)

단위 : 명, 만 원

구 분		사 례 수	귀어 전 소득	귀어 후 소득
전 체		(15)	2,575	2,868.8
귀어유형	I턴	(6)	2,855.6	3,000
	U턴	(9)	2,583.3	3,150

2) 귀어에 대한 인식

(1) 귀어 결정 이유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이 귀어를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어촌 생활 선호/어업 전망이 밝아서’라는 응답이 27.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도시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이 20.7%,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17.2%로 나타났다.

그 밖에 ‘사업실패/실직/미취업’ 10.3%, ‘기타’ 10.3%, ‘영어승계/부모님의 어업종사’ 6.9%, ‘퇴직 후 여생을 위해’ 및 ‘이상추구/인간다운 삶을 위해’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I턴은 도시생활의 어려움보다는 어업의 전망으로 인한 귀어 비율이 높았으나 U턴은 어업전망과 도시생활의 어려움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I턴의 귀어인이 어업종사에 적극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24 | 귀어 결정 이유(정부 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어촌생활 선호/어업 전망이 밝아서	도시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 실패/ 실직/ 미취업	영어 승계/ 부모님의 어업중사	퇴직 후 여생을 위해	이상추구/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타
전 체	(29)	27.6	20.7	17.2	10.3	6.9	3.4	3.4	10.3
귀어 유형	I턴	(7)	28.6	14.3	14.3	0.0	0.0	14.3	14.3
	U턴	(20)	25.0	25.0	10.0	10.0	5.0	0.0	10.0
	J턴	(2)	50.0	0.0	50.0	0.0	0.0	0.0	0.0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29% ‘사업실패/실직/미취업’라는 응답이 19%, ‘퇴직 후 여생을 위해’ 14%, ‘어촌생활선호/어업전망이 밝아서’ 14%순이었다.

어업생활 또는 어업과 관련된 목적보다 다른 다양한 이유에 의한 결정이 많았으며, 특히 I턴의 경우 어업에 대한 부분보다 퇴직 후 여생 또는 도시생활에서 어려움 해소 등 다양한 목적을 통해 귀어를 결정하고 있었다.

| 표 3-25 | 귀어 결정 이유(정부 미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사업실패 /실직/ 미취업	퇴직 후 여생을 위해	어촌 생활 선호/ 어업전망이 밝아서	도시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상추구/ 인간다운 삶을 위해	기타
전 체	(21)	29	19	14	14	9	5	10
귀어 유형	I턴	(14)	28.6	21.4	7.1	14.3	0	7.1
	U턴	(7)	28.6	14.3	0	28.6	14.3	14.3

(2) 귀어 지역 선택 이유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부모, 형제, 친구 등 연고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72.4%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응답자 29명 중 21명 정도가 연고가 있는 지역으로 귀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귀어에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20.7%, ‘귀어 시 지원내용이 타 지역보다 좋기 때문에’ 및 ‘기타’라는 응답이 3.4%로 나타났다.

U턴의 귀어인은 부모, 형제 등의 연고가 100%인 반면 I턴 귀어인은 어업종사에 적합한 지역 또는 정부 지원내용을 파악 후 더 유리한 지역을 선택하여 귀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6 | 귀어 지역 선택 이유(정부 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부모, 형제, 친구 등 연고가 있어서	귀어에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귀어 시 지원내용이 타 지역보다 좋기 때문에	기타
전 체		(29)	72.4	20.7	3.4	3.4
귀어 유형	I턴	(7)	14.3	57.1	14.3	14.3
	U턴	(20)	100.0	0.0	0.0	0.0
	J턴	(2)	0.0	100.0	0.0	0.0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또한 ‘부모, 형제, 친구 등 연고가 있어서’라는 응답이 55.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과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표 3-27 | 귀어 지역 선택 이유(정부 미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부모, 형제, 친구 등 연고가 있어서	귀어에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귀어 시 지원내용이 타 지역보다 좋기 때문에	기타
전 체		18	55.6	33.3	11.1	0
귀어 유형	I턴	11	63.6	27.3	9.1	0
	U턴	7	42.9	42.9	14.3	0

3) 귀어 과정

(1) 귀어 결정 시 어려움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이 귀어를 정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초기 투자 자금’이라는 응답이 5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귀어정보 부족’ 10.3%, ‘어촌계/수산업 진입장벽’ 10.3%, ‘마을분위기 적응/관계형성’ 및 ‘기타’ 6.9%, ‘어업 관련 기술지도’ 및 ‘여가, 문화, 의료복지 환경’ 3.4%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표 3-28 | 귀어 결정 시 어려움(정부 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 례 수	초기 투자 자금	귀어 정보 부족	어촌계/ 수산업 진입장벽	마을 분위기 적응/ 관계형성	기타	어업 관련 기술지도	여가, 문화, 의료복지 환경
전 체	(29)	58.6	10.3	10.3	6.9	6.9	3.4	3.4
귀어 유형	I턴	(7)	71.4	14.3	0.0	0.0	14.3	0.0
	U턴	(20)	60.0	10.0	10.0	5.0	0.0	5.0
	J턴	(2)	0.0	0.0	50.0	0.0	0.0	50.0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귀어인의 경우 또한 ‘초기 투자 자금’이라는 응답이 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귀어정보 부족’ 20%, ‘자녀교

육’ 20%로 조사되었다.

귀어의 결정 중 초기투자자금과 귀어 관련 정보의 부족은 귀어인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귀어를 위한 대출 등 금융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29】 귀어 결정 시 어려움(정부 미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초기 투자 자금	귀어정보 부족	자녀교육	어업 관련 기술지도	어촌계/수산업 진입장벽	여가, 문화, 의료복지 환경
전 체		20	35	20	20	15	5	5
귀어 유형	I턴	13	38.5	23.1	15.4	7.7	7.7	7.7
	U턴	7	28.6	14.3	28.6	28.6	0	0

(2) 지역주민과의 관계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이 귀어한 지역의 주민/마을리더와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좋음’이라는 응답이 62.1%(매우 좋음: 27.6% + 좋음: 34.5%)로 ‘나쁨’이라는 응답 6.9%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지역주민과의 관계가 나쁜 경우는 거의 없으나 일부 귀어인은 연고가 없이 와서 텃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귀어인이 기존 주민의 수입을 뺏어간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0】 지역주민과의 관계(정부 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좋음	보통	나쁨
전 체		(29)	62.1	31.0	6.9
귀어 유형	I턴	(7)	57.1	42.9	0.0
	U턴	(20)	70.0	25.0	5.0
	J턴	(2)	0.0	50.0	50.0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좋음’이라는 응답이 77.2%(매우 좋음: 22.2% + 좋음: 50.0%), ‘보통’이라는 응답 27.8%로 나타났으며 ‘나쁨’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유대관계와 대화를 통한 이해가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되며 배타성에 대한 부분이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31 】 지역주민과의 관계(정부 미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좋음	보통	나쁨
전 체		(18)	77.2	27.8	0
귀어 유형	I턴	(11)	81.8	18.2	0
	U턴	(7)	57.1	42.9	0

(3) 향후 의향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에게 향후, 귀어 의향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유지’라는 응답이 86.2%로 가장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귀어를 유지할 의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회가 되면 도시로 이주’라는 응답은 13.8%로 나타났으며, 타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는 수익성이 낮기 때문이거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어 이후 정착에 대한 문제 또한 향후 귀어정책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로 귀어 이후 멘토링 또는 피드백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표 3-32 | 향후 의향(정부 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유지	기회가 되면 도시로 이주
전 체		(29)	86.2	13.8
귀어 유형	I턴	(7)	100.0	0.0
	U턴	(20)	80.0	20.0
	J턴	(2)	100.0	0.0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는 100% 귀어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여 귀어를 계속하겠다는 의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3-33 | 향후 의향(정부 미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유지	기회가 되면 도시로 이주
전 체	(18)	100	0

4) 귀어 활성화를 위한 정부 추진 정책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에게 귀어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자체에서 더 강화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귀어 지원금의 규모, 대상 확대’라는 응답이 51.7%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지원금의 규모 및 대상 확대를 원하고 있었다.

그 밖에 ‘귀어인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이라는 응답이 17.2%, ‘어촌계/수산업 진입장벽 완화 등 제도 개선’이라는 응답이 13.8%, ‘귀어 정보에 대한 강화(홍보, 교육)’라는 응답이 10.3%, ‘기타’라는 응답이 6.9%로 나타났다.

| 표 3-34 | 정부/지자체에서 더 강화해야 할 정책(정부 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귀어 지원금의 규모, 대상 확대	귀어인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어촌계/수산업 진입장벽 완화 등 제도 개선	귀어 정보에 대한 강화 (홍보, 교육)	기타
전 체		(29)	51.7	17.2	13.8	10.3	6.9
귀어 유형	I턴	(7)	57.1	28.6	0.0	14.3	0.0
	U턴	(20)	50.0	10.0	20.0	10.0	10.0
	J턴	(2)	50.0	50.0	0.0	0.0	0.0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귀어인은 ‘귀어인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이 4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귀어 지원금의 규모, 대상 확대’라는 응답이 2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표 3-35 | 정부/지자체에서 더 강화해야 할 정책(정부 미지원)

단위 : 명, %

구 분		사례 수	귀어인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귀어 지원금의 규모, 대상 확대	어촌계/수산업 진입장벽 완화 등 제도 개선	귀어 정보에 대한 강화 (홍보, 교육)	기타
전 체		(20)	40	20	20	15	5
귀어 유형	I턴	(13)	23.1	30.8	23.1	23.1	0
	U턴	(7)	71.4	0	14.3	0	14.3

5) 귀어인 설문분석 결과 종합

귀어인의 설문은 정부 지원 여부를 통해 두 그룹으로 나누어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일부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었으나 많은 부분에서 공통적 특성이 나타났다. 정부 지원 여부로 구분하는 것에는 자의적 해석의 단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하려고 한 이유는 정부 지원의 많은 부분이 초기 정착자금 또는 투자자금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투자를 통한 귀어와 정착자금을 통한 귀어인지 정부의 지원여부를 통해 구분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I턴에 비해 U턴으로 귀어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지역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지역적 배타성과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 부분에 대한 주요한 차이점이 나타났다는데 정부 지원을 받은 I턴 귀어인의 소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증가폭이 높아 이에 따른 I턴 귀어인의 정착과정 또는 어업행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I턴 귀어인의 종사업종이 어업생산과 소득이 높은 양식어업에 비해 어선어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정부/지자체에서 귀어활성화를 위해 더 강화해야 할 정책이나 향후 추진해야 하는 정책에 관한 의견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은 귀어인과 그렇지 않은 귀어인의 차이가 나타났다. 초기 귀어 결정 시 초기투자자금의 부족이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귀어 관련 정보 부족 또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투자자금의 지원 또는 귀어정보와 관련된 정책을 필요로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귀어인에게서는 다른 의견이 나타났다. 귀어 지원금에 대한 규모, 대상확대에 대한 요구는 같았으나 귀어인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의 필요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 귀어과정에서 귀어인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

4. 귀어·귀촌 정책의 문제점

귀어·귀촌은 제도적으로 2010년 이후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귀농·귀촌이 1990년대부터 검토·도입된 것에 비하면 뒤늦게 추진된 만큼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추진 실태상 문제점

(1) 어촌계 등 어촌사회의 진입장벽

귀어·귀촌 정책지원 사업을 통해 귀어난 가구 수는 2010년 54가구, 2011년 29가구로 우선 정책대상의 규모가 작다는 데 있다. 정책지원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지만 무엇보다도 귀어하는 데 있어 수산업의 진입장벽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귀농의 경우 농지를 구입하거나 임대하고 작물재배에 대한 기술 습득을 통해 귀농이 가능한 데 반해 귀어의 경우에는 귀어·귀촌 희망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촌계 진입에 한계가 있다. 즉 귀어인이 어촌계에 가입하려면 해당 어촌계원들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어촌계의 특성상 공동생산을 통한 소득분배 등 기득권 때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수도권의 일부 어촌계에서는 어촌계의 진입장벽을 제거하여 많은 귀어인을 어촌계원으로 받아들여 성공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어촌계는 여전히 배타적인 성향을 보여 이를 해소·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 귀어·귀촌 지원을 위한 홍보 및 지원 기능 부재

귀농·귀촌 정책과 비교하여 귀어·귀촌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귀어인의 홍보 및 지원을 위한 종합센터에서 나타나고 있다. 귀농·귀촌을 위한 귀농귀촌 종합센터(농촌진흥청)에서는 귀농자가 필요한 귀촌정보, 교육, 지원프로그램, 귀농 후 관리 등 맞춤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귀어·귀촌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등 귀어민을 위한 귀어·귀촌 종합센터가 부재한 상태이다. 도시민이 귀어·귀촌을 하기까지는 많은 정보와 제2의 삶을 펼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실제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귀농·귀촌종합센터와 통합하여 귀어인에 대한 정보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귀어·귀촌에 특화된 맞춤형 종합센터를 구축·운영할 필요가 있다.

(3) 교육프로그램의 부족

귀어·귀촌은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이 귀농·귀촌에 비해 매우 취약한 여건에 있다. 귀농·귀촌의 경우에는 중앙정부,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각 기관별·지역별로 다양한 커리큘럼과 수요자의 니즈에 맞춰 대응함으로써 귀농을 고려하는 많은 도시민들을 유치해 나가고 있다.

반면에 귀어·귀촌의 교육 프로그램은 수산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귀어인 어촌정착 프로그램」이 유일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한정된 정보에 의해서만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에도 기존 귀어·귀촌의 성공사례와 실패사례, 귀어 정착과정에 대한 단계별 프로그램 등 실제 귀어·귀촌에서 필요한 내용을 지원하는 커리큘럼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4) 귀어 유도를 위한 전략적 접근 부재

귀농·귀촌은 탈북자, 공무원, 군인 제대 예정자, 출소 예정자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탈북자, 은퇴 공무원이나 군인, 출소 예정자 등 안정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므로써 귀농인의 양적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반면에 귀어·귀촌은 귀어를 희망하는 도시민에 한정하여 귀어·귀촌을 유도하고 있어 정책대상과 규모를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각 수요자에 맞는 맞춤형 귀어를 위한 시스템도 부재한 상태이다.

| 표 3-36 | 귀농·귀어 정책의 비교

구 분	귀농·귀촌	귀어·귀촌	비 고
종합센터 운용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없음	귀어를 위한 종합센터 부재
귀농·귀어가 실태조사	매년 실시 후 결과 발표	없음	귀어가에 대한 실태조사 없음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 귀농교육 프로그램 · 생태귀농학교 · 지역귀농학교 · 도시민 웰빙농사교육 등	수산인력개발원 (귀어가 어촌정착 교육)	귀어의 경우 오프라인 5일 합숙교육에 한정
교육대상	· 귀농 희망 도시민 · 탈북자 귀농 · 제대 예정 군인 귀농 · 정부부처 등 퇴직예정 공무원 · 출소예정자 취업 창업지원	귀어 희망 도시민	다양한 수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필요
주택 지원	· 귀농가 주택 마련 지원 · 전원마을 조성(우선분양) · 농어촌뉴타운조성(우선분양)	귀어가 주택 마련 지원	귀농자의 경우 타 농촌 지원사업에서 우선적으로 분양
농산업 인턴제 지원	농산업 인턴제 운영	-	
창업자금 및 컨설팅 지원	· 경종분야 창업자금 · 축산분야 창업자금 · 농촌 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 수산분야 창업자금 · 어촌비즈니스 창업자금	-
기타 지원 (지자체)	· 교육훈련비 지원 · 의료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 · 농업발전기금 융자 · 컨설팅비 지원 · 귀농정책자금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 규모화 지원 · 임대/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 귀촌 정착 자금 융자	· 교육훈련 지원 · 의료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주택 수리비 지원 · 귀어정착을 위한 사업 · 어업재해에 대한 지원 · 어업경영 규모화 지원	귀어인에 대한 지원은 일부 지 자체에서만 시 행되고 있음

(5) 귀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발굴 부족

지자체 차원에서 귀농·귀어민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정하여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귀농은 82개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귀어·귀촌의 경우 귀어 활동에 특화된 지원사업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으며, 귀농인 지원사업의 범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이다. 귀어민이 귀어·귀촌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정착, 안정화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사업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2) 설문조사를 통한 귀어·귀촌 정책의 문제점

귀어·귀촌을 고려하는 도시민들과 어촌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고 있는 귀촌인과 귀어인을 통하여 귀어·귀촌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귀농에 비해 귀어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귀어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어촌의 많은 지역이 반농·반어의 형태이나 어업보다는 농업의 인식이 높았다. 지자체의 귀농·귀어에 대한 정보제공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귀농에 대한 정보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귀어인의 경우 또한 귀어 이전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귀농에 비해 귀어는 인지도에 한계를 가진다.

둘째, 귀어·귀촌을 위한 어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 도시민의 인식은 어촌으로의 귀촌과 귀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업에 대한 막연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 어촌으로 귀촌 이후 어업을 원한다 하더라도 어업기술과 비용 등으로 인해 어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로 인해 귀어 이후의 정책적인 지원에서 귀어인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셋째, 어업과 어촌계의 장벽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업과 관련한 많은 정보를 획득한다하더라도 실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다. 귀어를 고려하는 도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귀어인이 펜션과 낚시 어촌 체험 등 어촌관광에 적합한 사업들을 고려하고 있거나 이미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것은 귀어인이 마을어장을 이용하여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에 등록해야 하는데 어촌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오랜 기간 등이 요구되기도 한다.

넷째, 초기 투자자금을 위한 귀어 지원금의 규모와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 농림수산식품부 귀어귀촌 정책지원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귀어귀촌 관련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보다는 개인적인 투자자금으로 귀어 귀촌한 경우가 많았다. 귀어를 위한 지원 자금을 받기 위한 과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 자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귀촌은 여전히 농촌을 중심으로 고려되고 있다. 귀촌의 대상지로 어촌은 산촌보다도 낮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며 도시민들이 귀어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도 이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귀농학교는 전국적으로 많이 운영 중이지만 귀어학교는 찾기 쉽지 않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 귀촌 종합센터에 귀어 관련 정보가 있으나 여전히 양과 질에서 부족한 실정이다. 귀농과 귀어는 명확히 구분되는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어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들을 귀농에서 모두 담아낼 수 없다.

귀농·귀촌을 원하는 많은 도시민들이 귀어·귀촌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기관에서는 이들을 위한 정보제공과 인식의 변화에 도움을 주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또한 어촌으로 귀촌한 사람들이 귀어할 수 있는 정책과 실질적 어업을 하고 있는 귀어인의 정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이 함께 필요하다.

제4장 귀어·귀촌 정책방향

1. 귀어·귀촌 정책의 목표 및 정책방향

1) 귀어·귀촌 정책의 목표

국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어촌은 연안의 다양한 자원 중에서 주로 수산물을 생산하여 소득을 얻는 어촌주민의 생활공간이다. 이러한 어촌은 육지영토의 4.5배인 해양영토의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 국토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수산물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연안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수산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구와 어가의 소득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도시주민과 어촌주민 간의 삶의 질의 수준 격차는 여전하다. 그 결과 어촌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어촌 삶의 질 수준이 도시와 격차가 큰 것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주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제적 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태자원과 문화자원이 풍부한 바다와 어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연안의 수요는 수산자원뿐만 아니라 자연자원과 문화자원 등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잠재적 가치 창출 기회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연안의 뛰어난 경관자원, 지역 수산 특산품의 먹거리, 생태자원 등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주요한 자원이다. 레이건 미대통령이 “사람이 정책이다.”이라고 말했듯이, 이러한 연안 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적자원이 무엇보다 필요

한 시점이다.

이와 같이 연안은 여러 가지 자원이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다. 그러나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어촌의 인적자원의 유입과 육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정부는 어촌의 인력육성 정책 중의 하나로서 귀어·귀촌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귀어·귀촌 정책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귀어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어업인력의 감소는 어업의 지속적 발전에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정부는 귀어인을 중심으로 귀어·귀촌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통한 어업소득의 증가뿐만 아니라 연안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어업 외 소득의 증가 또한 어촌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수산·어촌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귀어·귀촌 정책의 범위가 귀어인뿐만 아니라 귀촌인을 대상으로 확대되어 어업의 지속적 발전을 포함한 어촌경제 활성화의 정책 수단으로서 귀어·귀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따라서 귀어·귀촌 정책의 목표를 ‘우수한 인적자원 유입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로 설정한다.

2) 귀어·귀촌 정책방향

(1) 어촌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 대응의 효율성 제고

시장경제의 핵심 요소는 수요자와 공급자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도 어촌의 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한 공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을 통한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은 어장과 어항, 어촌 등 공간과 자본, 그리고 노동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마을에 한정된 어촌은 어촌의 다양한 자원 중에

수산물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어촌의 역할을 제한할 수 있다. 물론 어촌의 수산물 공급은 국민의 먹거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중요한 어촌의 기능이다. 수산물 공급기능은 어촌의 다양한 기능 중의 하나다. 즉 어촌은 연안환경 보전기능, 생태계 유지 기능, 아름다운 경관제공 기능, 휴양레저 기능, 어촌문화유산 전승기능, 국토보전 및 안보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토대다.

국민의 수요는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국민의 욕구 중 어촌의 기능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건강, 친환경, 어메니티, 레저, 교육 등에 대한 욕구다. 즉 어촌, 어장, 어항의 공간과 이 공간들에 있는 다양한 자원을 융합함으로써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다. 수산물과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여 어촌의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을 위한 자본과 상이한 자본이 어촌으로 유입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단순한 노동이 아닌 노동과 경영 마인드가 결합된 인적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귀어·귀촌 정책은 귀어인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 차원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2) 귀어·귀촌 정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어촌발전

수산업의 근거지인 어촌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결합한 복합 산업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다. 수산업법 제2조에 수산업을 어업, 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 가공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어업인이 어장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가공·유통시키는 산업으로 수산업을 정의함으로써 어촌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어촌, 어항, 어장의 세 공간은 수산업의 공간임과 동시에 국민의 생활공간,

도시와 어촌의 교류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의 잠재적 가치는 인간과 시간이 결합될 경우에 더욱 커진다. 인간의 삶은 공간 및 시간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의 가치는 인간과의 연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공간으로서 어촌, 어장, 어항의 지속적 가치창출의 전제조건은 경제적 지속성, 사회·문화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이다. 즉 지역주민이 공간으로부터 계량적 편익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사회·문화적으로 특성이 유지·계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이 보전·유지될 때 어촌, 어항, 어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어촌이 경제적 지속성, 사회·문화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을 가질 때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지속성의 주체는 인간이다. 따라서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귀어·귀촌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3) 귀어·귀촌 정책을 통한 어촌 개방 촉진

수산업법은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달성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 제8조의 면허어업, 제41조의 허가어업, 제46조의 신고어업 등 관련 규정은 수산물 생산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즉 바다,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등에서 도시주민은 물론이고 허가·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어촌주민 이외의 자가 수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어업면허는 어장개발계획의 범위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어업권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 그리고 허가어업은 업종별 허가정원수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면허어업과 허가어업에 참여할 수 있는 어촌주민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어촌계나 수산업어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하는 마

을어업은 어촌계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²⁾ 그러나 어촌으로 I턴 혹은 II턴 하는 도시주민은 어촌계의 동의를 얻어야 어촌계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어촌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도시주민이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함에 있어서 법·제도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업의 진입장벽뿐만 아니라 어촌은 공동생산주체로서 어촌계를 토대로 생산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인이 어촌에 정착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따라서 어촌의 개방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4) 귀어·귀촌 정책과 수산정책사업의 연계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업의 발전과 어촌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여러 수산분야의 다양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수산정책국과 어업자원국의 사업으로 분류되며, 동일한 국에서도 과 단위로 정책사업이 추진된다. 대부분의 정책사업은 독립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사업 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정책사업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사업의 추진 주체는 대부분 사람이기 때문에 수산정책사업과 귀어·귀촌 정책의 연계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람이 힘’이고, ‘사람이 정책’이라는 말과 같이 정책사업의 성공은 사업의 추진 주체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합한 인적자원이 정책사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사업의 추진계획의 시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어촌의 노령화와 어촌의 폐쇄성으로 수산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합한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촌의 어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어촌체험

2) 수산업법 제9조 제1항.

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도시주민의 교류를 통한 소득을 창출하는 3차 산업이다. 1차 산업인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이 어촌체험 관광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어촌체험관광사업의 경영자의 육성 혹은 확보를 위한 인력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어촌체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어촌의 경우에 관광 마인드와 경영 마인드를 갖춘 귀촌인을 활용할 경우에 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와 같이 수산정책사업을 귀어·귀촌 사업과 연계시킬 경우에 정책사업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업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어·귀촌 정책은 어촌의 다기능화를 통한 어촌 활성화는 물론이고 귀촌인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귀어·귀촌 정책 과제

1) 귀어·귀촌 실태의 정보화

귀어·귀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귀어·귀촌의 실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귀어인의 파악은 2010년부터 시행한 귀어인의 경제적 지원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귀어한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어촌으로 이주를 하였지만, 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예를 들어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 중에 어촌계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며, 또한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 중에 어촌계원으로 가입을 원하는 사람도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인구를 파악하고 있지만, 연안의 경우에 어촌으로 이주할 의향으로 귀촌한 사람과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으로 귀촌한 사람을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귀어정책이 아닌 귀어·귀촌 정책의 효

을적 추진을 위해서 귀어 인구와 어촌으로의 귀촌 인구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귀어·귀촌 실태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귀어인과 귀촌인의 실태 파악에는 어촌주민의 실태를 잘 아는 어촌계장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귀어인과 귀촌인을 구별하고 귀어와 귀촌의 목적, 귀어인과 귀촌인의 이전 직업 및 재능 등을 조사하여 귀어·귀촌의 정책수단의 개발에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귀어·귀촌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성공적인 귀어인과 귀촌인을 발굴할 수 있으며 이들을 귀어·귀촌인과 예비 귀어·귀촌인 대상의 교육프로그램의 강사, 혹은 귀어·귀촌의 컨설턴트로 활용할 수도 있다.

2) 체계적이고 다양한 귀어·귀촌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귀어·귀촌 정책의 효과는 귀어가구와 귀촌가구의 성공적 정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귀어가구와 귀촌가구 수가 많을지라도 정착률이 낮으면 귀어·귀촌 정책의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은 귀어·귀촌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서 중요한 요소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귀어인을 대상으로 ‘귀어가 어촌정착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즉 농림수산물식품연수원의 수산인력개발센터에서 매년 두 차례 귀어가 정책금융을 받은 귀어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수산업 발전종합정책, 수산관계 주요 법령, 귀어 성공사례, 창업 컨설팅, 세계수산업 동향, 수산물 품질관리, 해면양식, 내수면 양식, 수산생물 질병관리, 주요 어구어법과 그린 에너지 공학개발, 어선허해 및 운용기술, 선원·선박 관계 법규, 어업경영 정보화, 어업권 및 허가 취득, 귀어가 정책 포럼, 창조적 어업경영, 귀어가 정책금융 지원 해설 등의 과목 등으로 5박 6일 입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목에서 알 수 있듯이 수산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양식어업과 어선어업의 개괄적 내용으로 귀어가 어촌정착 과정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과정은 귀어가 정책 금융을 받은 사람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희망 귀어인은 물론 귀촌인에게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어업기술을 습득할 수 없기 때문에 피교육생이라 하더라도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업기술을 습득하여야 어업에 종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귀어·귀촌 교육과정은 귀어인 혹은 귀촌인의 성공적 정착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체계적이고 다양한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귀어인과 귀촌인을 대상으로 각각 서로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한다. 또한 피교육생을 다시 귀어·귀촌을 결정한 집단과 예비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야 한다. 귀어·귀촌 교육이 피교육생의 어촌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에 적합한 교육기간과 현장실습 및 이론 등을 병합한 귀어·귀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귀어·귀촌 진입장벽 완화

단순히 노후생활을 어촌에서 보낼 목적의 귀촌인을 제외한 귀촌을 준비 중인 예비 귀촌인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어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특히 귀어인은 어업 종사 여부와 종사할 경우에 소득의 크기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귀어인의 어업 종사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귀어인이 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촌계에 가입하거나 어업면허 혹은 어업허가를 받는 것이다. 귀촌인이 어촌계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어촌계원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협소한 마을어장, 어촌주민의 배타

성, 어촌계의 공동이익의 배분 등의 문제로 어촌계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다.

수산업법 제4조에 따라 ‘어장이용개발계획’에 따라 형성된 어장에 한해서 면허어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장의 공급이 면허어업의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이 면허어업에 종사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동법 제41조에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에 관하여 규정한 조항으로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이 어선어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광역 혹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수산자원의 관리와 어선어업의 유지·성장을 위하여 어선을 감척하고 있기 때문에 귀촌인이 허가어업에 종사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와 같이 어촌 공동체로서 어촌계가 존재하고, 어업인이 공공재로서 어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진입장벽이 있다. 따라서 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여 어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귀어·귀촌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신규어장의 일정 비율 내에서 귀어인에게 어업면허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면허어업 우선순위에 귀어인을 포함시켜 귀어인에게 어업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면허어업의 초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귀어인에게 어업면허를 주는 것은 기존 어촌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어촌계원이 자율적으로 귀촌인에게 마을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수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생산성이 높고 넓은 마을어장을 소유한 어촌계가 귀촌인을 어촌계원으로 가입시킬 경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려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서 수산분야 공공투자자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주거나 공공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평가표의 항목에 어촌계원 신규 가입 인원을 포함시키는 것 등을 고려할 수 있다.

4) 귀어·귀촌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귀어·귀촌 정책에서 일자리 창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예비 귀촌인의 어촌 이주를 촉진시키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일자리 창출은 어촌의 경제적 활성화, 사회·문화적 활성화, 교류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어업의 생산기반 공간인 어항의 기능시설과 편익시설은 어촌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이다. 어항을 지역경제 중심공간으로 조성할 목적으로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항 이용 고도화 사업’은 어촌에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어촌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문화적 재능을 가진 귀촌인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문화 수준을 높여 어촌의 사회·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촌주민의 배타적 성향은 도시와 어촌의 교류를 통한 어촌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로부터 이주한 귀촌인에게 도시와 어촌의 교류와 관련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어촌의 교류 활성화를 이끌 수 있다.

이와 같이 귀촌인이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어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제한적인 현실에서 귀촌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귀촌인의 정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어촌의 경제적 활성화, 사회·문화적 활성화, 그리고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5) 독립적인 귀어·귀촌 업무체계 확립

어촌과 농촌은 1차 산업인 어업과 농업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공간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이 있다. 어촌의 주요 생산 공간인 바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공공재이며, 마을어장은 공동체인 어촌계가 이용주체이다. 또한 공간과 자원 이용의 배타성이 강하기 때문에 열린 경제공간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귀어·귀촌 정책은 귀농·귀촌 정책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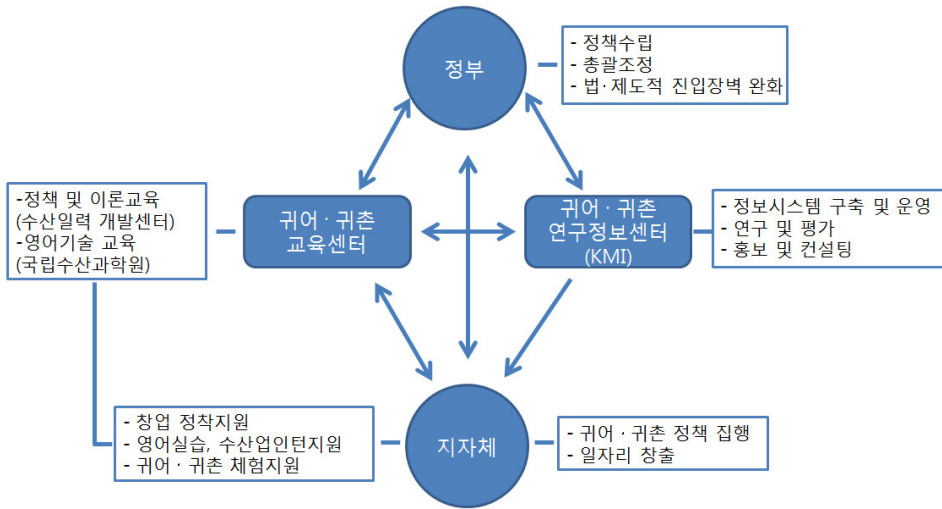
그러나 귀어·귀촌 정책은 귀농·귀촌 정책의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귀어·귀촌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의 ‘귀농·귀촌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귀어·귀촌 정책의 업무를 귀농·귀촌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대부분은 어업기술센터를 통하여 귀어가 정책금융 업무를 지원하며, 귀어·귀촌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귀어·귀촌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귀어·귀촌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응한 귀어·귀촌 정책의 수립과 추진뿐만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즉 귀농·귀촌 정책의 부분이 아니라 귀어·귀촌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정조직과 함께 귀어·귀촌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비 귀어·귀촌인의 상담 창구, 나아가 귀어·귀촌의 교육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어·귀촌인 센터’의 설립도 필요하다.

3. 귀어·귀촌 정책의 추진 주체와 역할

1) 귀어·귀촌 정책의 추진 주체

<그림 4-1>은 귀어·귀촌 정책의 추진 체계를 나타낸다. 귀어·귀촌 정책은 크게 중앙정부의 정책 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으로 나눌 수 있다. 귀어·귀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귀어·귀촌의 교육, 귀어·귀촌의 정보, 귀어·귀촌의 컨설팅, 귀어·귀촌의 연구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귀어·귀촌의 교육 주체와 귀어·귀촌의 연구·정보 주체가 필요하다.



| 그림 4-1 | 귀어·귀촌 정책 추진 체계도

2) 귀어·귀촌 정책의 추진 주체의 역할

중앙정부는 귀어·귀촌 정책을 수립하고, 귀어·귀촌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수립한 귀어·귀촌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귀어·귀촌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수립한 귀어·귀촌 정책이 지방정부에서 집행하는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더 나은 귀어·귀촌 정책의 수립 혹은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건의할 수도 있다. 즉 귀어·귀촌 정책의 계획과 집행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더 나은 귀어·귀촌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정책방향의 수정·보완 혹은 새로운 정책과제를 도출하여 차년도의 귀어·귀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귀어·귀촌의 교육과 귀어·귀촌의 정보와 컨설팅은 귀어·귀촌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예비 귀어·귀촌인이 귀어·귀촌

의 사전준비 정도는 교육, 정보, 컨설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귀어·귀촌 교육과 정보·컨설팅을 전담하는 기관이 필요하다. 귀어·귀촌 교육은 크게 영어기술 교육과 귀어·귀촌 정책 및 이론 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우리나라 수산기술 및 과학·연구를 하고 있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후자는 수산전문교육과 어업인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는 수산인력개발센터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기관은 동일한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귀어·귀촌 교육에 관한 상호 협조와 협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귀어·귀촌 교육센터와 지방정부는 귀어·귀촌인의 창업 및 정착지원, 영어실습 및 수산업 인턴지원, 귀어·귀촌 체험 지원 등을 서로 협조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즉 귀어·귀촌인의 교육이 현장에서 접목되어야 귀어·귀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으므로 귀어·귀촌 교육센터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귀어·귀촌의 정보는 귀어·귀촌인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귀어·귀촌 교육센터, 지방 정부 등이 정책 수립과 집행,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항이다. 또한 귀어·귀촌 정보시스템은 귀어·귀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평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귀어·귀촌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연구, 평가, 홍보, 컨설팅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귀어·귀촌 연구정보센터는 중앙정부의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귀어·귀촌인에게 귀어·귀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귀어·귀촌 정책과 교육, 그리고 귀어·귀촌 집행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귀어·귀촌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 효율적 집행 방안 등을 제시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 론

정부는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 공간인 어장과 수산생산기반 시설인 어항에 비하여 어촌주민이 거주하는 어촌은 수산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은 어장과 어항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의 중요한 주체지만, 어촌의 인적자원에 대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지속적인 어촌인구의 노령화와 감소로 어촌의 부가가치 창출의 가능성은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 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의 일환으로 귀어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귀어를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귀어·귀촌의 정책금융으로 도시민을 어촌으로 이주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어업의 진입장벽은 도시민의 귀어를 가로막는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도시민이 어업기술을 습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한다. 귀어 중심의 귀어·귀촌 정책은 연안의 다양한 자원을 수산자원만의 이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즉 귀어 중심의 귀어·귀촌 정책은 어업인 중심의 닫힌 인적자원 유입 정책이다. 그러나 어촌과 어장은 연안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서 다양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귀어·귀촌 정책은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귀어·귀촌 정책은 단지 어촌인구의 증가를 촉진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어촌 활성화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유입을 촉진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또한 귀어·귀촌 정책은 어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과 어촌주민의 융화를 이끌어야 한다. 어촌의 지리적 여건과 법·제도적 여건으로 인한 어촌주

민의 배타성은 귀어인 혹은 귀촌인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의 장애요소이자 어촌의 잠재적 가치 창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이러한 어촌주민의 배타성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어촌주민 스스로 배타성으로 인한 문제를 인식하고, 어촌을 열린 공간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귀어·귀촌 정책은 어촌주민과 어촌으로 이주하는 귀촌인에게 모두 윈-윈의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촌주민의 공간에 대한 우선적 이용권을 귀어인 혹은 귀촌인에게 일방적으로 허용하는 대신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한 후에 진입장벽을 완화하여야 한다. 또한 귀촌인이 그들의 다양한 능력, 경험, 자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어촌의 다양한 자원과 공간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귀어·귀촌정책은 각자 다른 목적으로 어촌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이 성공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시민의 성공적인 어촌정착이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함으로써 어촌발전을 이끌어 어촌주민에게도 여러 가지 편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책 제언

어촌, 어항, 어장은 연안을 구성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국토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세 공간은 서로 다른 특성의 자원을 갖고 있어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갖는다. 서로 다른 특성의 자원을 융합함으로써 연안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러한 자원들을 융합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주체는 다양한 사람이다. 어촌, 어항, 어장의 자원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자원을 활용할 주체인 사람이 부족한 실정이다. 즉 어촌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는 인적

자원의 양적 문제뿐만 아니라 질적 문제도 야기시킨다. 따라서 귀어·귀촌 정책은 이러한 어촌의 인적자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중의 하나다. 정부는 귀어·귀촌 정책을 통하여 어업인력의 확보는 물론이고 연안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민의 어촌 이주를 촉진시켜야 한다.

이와 같이 귀촌·귀어정책은 단순히 어촌의 인구 감소에 대응한 정책이 아니라 연안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적자원 육성정책 중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어촌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어촌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귀어·귀촌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연안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연안의 중요한 공간인 어촌, 어항, 어장의 자원을 활용하고 우수한 인적자원의 어촌 이주를 촉진하는 귀어·귀촌 정책은 어촌 활성화, 나아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국부를 창출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따라서 2009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귀어·귀촌정책을 검토하고 수산업의 발전, 나아가 어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귀어·귀촌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귀어·귀촌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귀어·귀촌정책은 어촌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응한 미래 지향적 정책이어야 한다. 귀어·귀촌 정책은 귀어인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어촌의 잠재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응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육성과 활용 차원에서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귀어·귀촌 정책은 어촌의 경제적 지속성, 사회·문화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을 이끄는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즉 귀어·귀촌정책은 인구감소로 인한 어촌문제를 어업의 지속적 유지는 물론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인적자원 정책의 일환으로서 어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도시주민이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할 때 법·제도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이러한 어업의 진입장벽뿐만 아니라 어촌은 공동생산 주체로서 어촌계를 토대로 생산활동과 생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부인이 어촌에 정착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와 같은 닫힌 어촌은 어촌 발전의 걸림돌이다. 어촌발전을 위하여 열린 어촌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외부인과의 소통, 교류, 나아가 외부인의 어촌 정착을 통하여 어촌은 열린 공간으로 전환될 것이다. 따라서 어촌의 개방을 촉진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귀어·귀촌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귀어·귀촌 정책은 수산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야 한다.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합한 인적자원이 정책사업의 추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사업의 추진계획의 시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수산정책사업을 귀어·귀촌 사업과 연계시킬 경우에 정책사업의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어 사업의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귀어·귀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인구를 파악하고 있지만, 연안의 경우에 어촌으로 이주할 의향으로 귀촌한 사람과 농촌으로 이주할 의향으로 귀촌한 사람을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나 귀어정책이 아닌 귀어·귀촌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귀어 인구와 어촌으로의 귀촌 인구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귀어·귀촌의 실태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귀어가구와 귀촌가구 수가 많을지라도 정착률이 낮으면 귀어·귀촌 정책의 효과는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귀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은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귀어·귀촌 교육프로그램은 귀어·귀촌 정책의 성공적 추진에서 중요한 요소다. 귀어·귀촌인이 어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어촌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귀어·

귀촌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어촌 공동체로서 마을어업, 면허어업과 허가어업 등으로 어업의 진입장벽이 높다. 따라서 어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하여 어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귀어·귀촌을 촉진하기 위하여 어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입장벽은 법·제도의 진입장벽의 완화를 고려하기 전에 진입장벽의 완화에 따른 기존 어촌주민과 새로운 귀어인과의 갈등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어촌계와 주민이 스스로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수단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예비 귀촌인의 어촌 이주를 촉진시키고,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여야 한다. 귀촌인이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어업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제한적인 현실에서 귀촌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귀촌인의 정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어촌의 경제적 활성화, 사회·문화적 활성화, 그리고 교류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섯째, 귀어·귀촌에 대한 사회·경제적 수요에 대응하여 귀어·귀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뿐만 아니라 행정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 즉 귀농·귀촌 정책의 부분이 아니라 귀어·귀촌 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는 행정조직이 필요하다.

여섯째, 귀어·귀촌 정책의 추진주체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즉 중앙정부는 귀어·귀촌 정책을 수립하고, 총괄·조정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귀어·귀촌 정책을 효율적을 집행하여야 한다. 또한 귀어·귀촌 연구·정보센터는 귀어·귀촌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연구·평가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귀어·귀촌 정책을 홍보하고 컨설팅하여야 한다. 그리고 귀어·귀촌 교육센터는 귀어·귀촌인의 수요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귀농·귀촌 정책의 일환인 귀어·귀촌 정

책은 귀어인의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귀어인 대상의 정책금융은 어촌으로 이주하는 귀촌인이 어업에 종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어업 진입장벽과 어업기술 습득의 어려움 등으로 귀촌인이 어업에 종사할 기회를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양한 자원과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안은 1차 산업인 어업은 물론이고 2차 산업과 3차 산업이 가능한 공간이다. 따라서 귀어·귀촌 정책은 어촌과 어항, 그리고 어장의 자원을 융합한 복합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적자원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어업에 종사할 귀어인 중심의 귀어·귀촌 정책에서 탈피하여 복합산업 공간으로서 어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강대구, 「귀농·귀촌의 현황과 정책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제17권 4호, 743-771, 2010.

_____, 「귀농동기에 따른 귀농정착과정」,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 37. No. 1, 2007, pp. 59~98.

김정섭,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 지방자치단체의 과제」, 『농촌지도와 개발』, 제16권 3호, 2009.

김정섭 외, 『귀농·귀촌 정책 추진 실태와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림수산물부, 『귀농·귀촌인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발전 방안 연구』, 2011.

농림수산물부, 『어업의 기본제도에 관한 연구』, 2012.

〈국외 문헌〉

R. A. Kramer *et. al*, “Human migration and resource use in Sulawesi fishing communities”, Proceedings 9th International Coral Reef Symposium, Bali, Indonesia 23-27 October 2000, Vol. 2.

Michael Corbett, “Rural Education and Out-Migration: The Case of a Coastal Community”, *Canadian Journal of Education*(28), 2005. pp. 52~72.

〈온라인 자료〉

농촌진흥청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http://www.returnfarm.com>

전국귀농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refarm.org>

전국농업기술자협회 홈페이지. <http://www.kafarmer.or.kr>

천안연암대학 귀농지원센터. <http://www.uiturn.com>

부록 1. 지자체 귀농·귀촌 관련 정책사업

| 부표 1 |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

도	지자체	주요 사업
경기 인천	용진군	· 교육훈련 지원 / 귀농 정착사업, 친환경농업사업 ·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 영농기반 지원
	양평군	· 귀농창업자금 지원 / 기초농어업교육 / 빈집정보센터 운영
	연천군	· 이사비, 빈집수리비, 정착장려금, 교육훈련비, 의료비, 출산장려금, 주택설계비, 경작비, 농업인턴비 지원
강원	강릉시	· 정착지원금 지원 / 강릉시 농업발전기금 용자 지원 · 주택자금 용자, 자녀 학자금, 농업경영 관련 교육훈련비 지원 · 농지 및 축사 등 각종 정보 제공 등
	양구군	· 교육훈련비(현장실습비,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귀농정책을 위한 사업비(생산소득사업, 생산기반시설) 지원 · 빈집수리비 지원
	영월군	· 교육훈련 지원 / 빈집 구입 및 수리비, 의료비,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정착, 영농 규모화,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자금 지원
	원주시	· 영농기반(귀농정착자금, 친환경 농업 지원, 빈집 알선과 집수리, 이사비용,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등) 지원 / 기본생활보장
	홍천군	· 귀농정착 사업,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용자 지원, 농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농가주택 수리비, 귀농인 농업인턴제 지원 · 교육훈련 지원 / 우수귀농인의 선정 및 지원
	평창군	·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 영농규모화 등을 위한 사업 ·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 농지 및 축사 등 각종 정보 제공
	양양군	· 농어업창업자금 지원 /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제공 · 귀농귀촌 체험학교 운영, 귀농귀촌 통합홍보마케팅 지원 · 빈집 수리비, 주택 수리비, 농어촌 진흥자금 용자, 양양군 농업발전기금 용자, 귀농귀촌에 필요한 컨설팅 및 교육훈련비 지원
충북	충청북도	· 교육훈련 지원 / 정착자금지원 / 시설보조
	충주시	· 귀농 정착자금 지원 / 주택 알선과 집수리, 이사비용 지원 ·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 농업경영에 필요한 사업
	제천시	· 교육훈련 지원 / 의료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옥천군	· 교육훈련 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음성군	· 교육훈련 지원 / 의료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단양군	· 교육훈련 지원 / 시설보조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등

| 부표 1 |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계속)

도	지자체	주요 사업
충남	충청남도	· 귀농 정보 제공 / 교육훈련 제공 / 정착자금 지원(창업 자금과 주택구입 자금 융자) / 시설보조(주택수리 등) / 사기진작(삶의 질과 복지 향상 지원 등)
	공주시	· 교육훈련 지원 / 시설보조 /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보령시	· 교육훈련비(현장 실습비,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생산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사업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
	아산시	· 귀농 정착을 위한 사업 /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 제공 · 각종 농업을 기준으로 하는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서산시	· 교육훈련 지원 / 시설보조(주택 또는 빈집 수리하고자 하는 자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 영농에 필요한 지원
	금산군	· 교육훈련 지원 / 시설보조 / 의료 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 인삼, 약초, 깻잎 등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등
	부여군	· 시설보조금 지원 / 교육훈련 지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서천군	· 전원마을 택지 우선 분양 / 빈집수리비 지원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 지원 ·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 제공 /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홍성군	· 교육훈련 지원 / 의료 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예산군	· 정착지원금 지원 / 빈집 정보제공 및 수리비 지원 ·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지원 / 농어업 발전기금 융자 지원 ·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 제공 /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전북	군산시	· 교육훈련 지원 / 농업 창업 자금 지원 / 농지 구입 자금 지원 · 주거 지원 / 기타 농업 관련 보조사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멘토 지원 / 농기계 임대 지원
	익산시	· 교육훈련비 지원 / 시설보조 / 농기계 임대 지원 / 자녀 학자금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정읍시	· 교육훈련 지원 / 정착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영농기반 자금 지원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남원시	· 귀농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 사업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기타 귀농자의 이사비용 지원 등 영농에 필요한 사업
	김제시	· 교육훈련 지원 / 의료 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기타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기계화 등 농업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 부표 1 |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계속)

도	지자체	주요 사업
전북	완주군	· 주택매입·수리·신축비 지원 / 농지임차·매입비 지원 / 출산장려금 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교육훈련 지원 / 기타 지원(지역사회 기여 활동비 지원, 이사비 지원, 학자금 지원)
	진안군	· 귀농인 소득금고 사업 / 농수산부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에 따른 사업 / 농수산부 귀농귀촌종합대책에 따른 사업 · 군 자체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을 위한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사업 ·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군 혹은 협회가 제안하거나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무주군	· 교육훈련 지원 / 주택 지원 /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 기금 및 융자금 지원 / 의료 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상담·자문 컨설팅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지원 등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사업 /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사업 /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농업기계화 촉진 사업 / 기타 농지 구입 등 귀농자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
	장수군	· 교육훈련비 지원 / 빈집수리비 지원 · 농가주택자금 융자금 우선 추천 / 순환농업 및 농촌소득사업 우선 추천 및 지원 / 영농 정착금 지원
	임실군	· 교육훈련보조 지원 /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비 보조 지원 / 정착금 보조 지원 / 귀농귀촌 정보지 보조 지원
	순창군	· 농, 임업시설물과 저온저장고 등 소득사업 / 농기계 지원 사업 / 친환경 관련 사업 / 농, 임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 자녀지원 / 교육 지원 / 정착 지원 / 이사비 지원
	고창군	· 농지구입 자금지원 / 영농정착금 지원 · 조기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부안군	· 교육훈련 지원 / 빈집 구입 또는 수리비 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전남	나주시	· 교육훈련비(현장실습비,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시설보조(빈집 구입 또는 수리비 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광양시	· 귀농 정착금 지원 / 교육훈련비(현장실습비,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사업의 지원 / 빈집 수리비 지원
	담양군	· 교육훈련 현장실습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곡성군	· 교육훈련비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 / 의료비 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구례군	· 귀농귀촌 정착을 위한 사업 / 귀농귀촌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 구입 및 수리비 / 농림수산물부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 공모사업 / 농림수산물부 귀농귀촌 종합대책에 따른 사업 / 군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농업분야 보조사업 /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 지원

| 부표 1 | 지방자치단체의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계속)

도	지자체	주요 사업
전남	고흥군	· 교육훈련 지원 / 영농기반 지원 / 귀농정착 장려금 지원 / 전문지식 기술활용 등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보성군	· 교육훈련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상담·자문 컨설팅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 지원 등 농림사업지침에 의한 사업 / 농업생산구조의 고도화 사업 / 농업생산기반의 정비·농업 기계화 촉진 사업 / 축산업, 임업, 어업 육성을 위한 사업 · 주택지원 /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 기금 및 융자금 지원 / 의료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업무상 재해에 대한 지원
	화순군	· 교육훈련 지원 / 시설보조 / 의료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강진군	· 교육훈련비(교육훈련비,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시설보조 / 의료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해남군	· 정착사업비 지원 / 빈집 정보 제공 / 주택자금 융자 지원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 지원 / 공사 수리비 지원 /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 임대농지, 휴경농지, 빈 축사 등 정보 제공 등
	영암군	· 귀농정착금 지원 / 교육훈련 및 현장실습비(현장실습비 및 귀농학교 수강료) 지원 / 시설보조 /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무안군 완도군	· 교육훈련 지원 / 주택 수리비 지원 / 의료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등
	함평군 영광군	· 교육훈련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 / 의료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귀촌 정보센터 등 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 /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 보육 및 문화활동시설 운영에 관한 경비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장성군	· 귀농정착금 지원 / 교육훈련 지원 / 주택수리비 지원,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진도군	· 귀농어업 정착 장려금 지원 /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등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신안군	· 교육훈련 지원 / 주택 신축 및 수리·임차 등 지원 / 자녀학자금 지원 / 귀농어업정착 지원금 지원 · 귀농정착을 위한 지원 /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 경영컨설팅 등 경영에 대한 지원

부록 2. 귀어·귀촌 대상자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 수산·어촌 관련 연구를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귀어민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의 참고자료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기본항목

항목	내용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나이	()세
귀어당시 나이	()세
귀어 이전 직업	일반 직업 세분으로 표기(설문업체)
귀어 전·후 거주지역	귀어 전(시군, 동) 귀어 후(시군, 읍면)
귀어의 형태	I턴 <input type="checkbox"/> U턴 <input type="checkbox"/> J턴 <input type="checkbox"/> (개별 정의 명시)

2. 귀하의 어업 종사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전업 ② 겸업(반농반어) ③ 기타()

3. 귀하의 어업 종사업종은 무엇입니까?

- ① 어선어업
- ② 양식어업(패류, 해조류, 어류 등 기타 동식물)
- ③ 어촌관광업(펜션, 체험, 유어낚시 등)
- ④ 수산물 유통, 가공업
- ⑤ 기타

3-1.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4. 귀어 전후의 연간 평균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귀어 전 ()만원
② 귀어 후 ()만원

5. 귀하께서는 귀어를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사업실패/ 실직/ 미 취업
- ②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③ 퇴직 후 여생을 위해
- ④ 도시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 ⑤ 어촌 생활 선호/ 어업 전망이 밝아서
- ⑥ 영어승계/ 부모님의 어업종사
- ⑦ 이상추구/ 인간다운 삶을 위해
- ⑧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 ⑨ 기타

6. 귀하께서는 해당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 ① 부모, 형제, 친구 등 연고가 있어서
- ② 귀어에 적합한 지역이기 때문에
- ③ 귀어 시 지원내용이 타 지역보다 좋기 때문에
- ④ 기타

7. 귀하께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귀어를 준비하셨습니까?

- ① 농림수산물부 귀어귀촌 정책지원사업
- ② 해당 지자체 귀어지원사업
- ③ 부모, 친지 등 가족, 친구 등을 통해
- ④ 스스로
- ⑤ 기타(_____)

8. 귀어를 정할 때 귀하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도시민 설문과 비교)

- ① 귀어정보 부족
- ② 초기 투자 자금(주택구입, 어선구입, 양식어장 확보, 기타)
- ③ 마을분위기 적응/ 관계형성
- ④ 어업 관련 기술지도(교육)
- ⑤ 자녀교육
- ⑥ 여가, 문화, 의료복지 환경
- ⑦ 어촌계/수산업 진입장벽
- ⑧ 기타

10. 귀어 이후 지역주민/마을리더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나쁨 ⑤ 매우 나쁨

10-1. 나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_____)

10-2. 개선을 위한 본인의 노력은 무엇입니까?(_____)

11. 귀하께서는 앞으로 귀어에 대한 의향은 어떻습니까?

- ① 유지 ② 타 지역으로 이주
- ③ 기회가 되면 도시로 이주 ④ 즉시 도시로 이주

11-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_____)

12. 귀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에서 더 강화해야 할 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

- ① 귀어 정보에 대한 강화(홍보, 교육)
- ② 귀어 지원금의 규모, 대상 확대
- ③ 귀어자에 대한 지속적인 컨설팅(어업기술, 가정환경, 애로사항 등)
- ④ 어촌계/수산업 진입장벽 완화 등 제도 개선
- ⑤ 기타

부록 3. 귀촌·귀어에 관한 도시민의 인식조사

설문일자 : 년 월 일

설문지역 : ① 서울 ② 부산 ③ 광주 ④ 대구 ⑤ 인천 ⑥ 울산

안녕하십니까?

저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 수산·어촌 관련 연구를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귀어민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귀하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의 참고자료 이외의 다른 어떤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개인에 관한 사항은 절대 비밀을 보장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조사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I. 귀촌 관련 의향에 관한 질문

1. 귀하께서는 어떤 지역으로 귀촌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 ① 농촌 ② 어촌 ③ 산촌 ④ 없음 ⑤ 기타

2. 귀하는 언제쯤 귀촌할 계획이십니까?

- ① 1년 후 ② 2~5년 후 ③ 6~10년 후 ④ 11~15년 후
⑤ 16~20년 후 ⑥ 21년 이후

3. 귀하는 어떤 동기로 어촌이주를 하려고 하십니까?

- ① 사업실패/ 실직/ 미취업
②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위하여

- ③ 퇴직 후 여생을 위해
- ④ 도시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 ⑤ 어촌 생활 선호/ 어업 전망이 밝아서
- ⑥ 영어승계/ 부모님의 어업종사
- ⑦ 이상추구/ 인간다운 삶을 위해
- ⑧ 정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통해
- ⑨ 기타

II. 귀어 관련 의향에 관한 질문

1. 당신은 어업에 종사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2. 귀하께서는 귀어 시 어떠한 업종을 고려하고 계십니까?
 ① 어선어업
 ② 양식어업(패류, 해조류, 어류 등 기타 동식물)
 ③ 어촌관광업(펜션, 체험, 유어낚시 등)
 ④ 수산물 유통, 가공업
 ⑤ 기타

3. 귀하께서는 수산계 교육과정을 이수/ 졸업 하셨습니까?
 ① 예(수산계 고등학교 / 수산대학) ② 아니오

4. 귀하께서는 수산업에 종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5. 귀하께서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귀어를 준비하실 예정입니까?

- ① 농림수산물식품부 귀어귀촌 정책지원사업
- ② 해당 지자체 귀어·귀촌지원사업
- ③ 부모, 친지 등 가족, 친구 등을 통해
- ④ 스스로
- ⑤ 기타(_____)

6. 귀하께서 귀어를 실질적으로 준비한다면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귀어정보 부족
- ② 초기 투자 자금(주택구입, 어선구입, 양식어장 확보, 기타)
- ③ 마을분위기 적응/ 관계 형성
- ④ 어업 관련 기술지도(교육)
- ⑤ 자녀교육
- ⑥ 여가, 문화, 의료복지 환경
- ⑦ 어촌계/수산업 진입장벽
- ⑧ 기타

7. 귀하께서는 귀어를 위해 정부,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귀어 정책자금 지원사업
- ② 어업기술 및 교육 관련 지원사업
- ③ 어촌정착을 위한 컨설팅 등 지원사업
- ④ 귀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
- ⑤ 기타

III. 인구통계 관한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① 40대 ② 50대 ③ 60대 ④ 70대 이상
3. 귀하의 출생지역은?
① 농촌 ② 어촌 ③ 산촌 ④ 도시
⑤ 기타
4. 귀하의 가족 수는(본인 포함)?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5. 귀하의 학력은?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졸 ④ 대학원 이상
6. 귀하의 직업?
① 자영업 ② 사무직 ③ 영업직 ④ 공무원
⑤ 주부 ⑥ 퇴직 ⑦ 휴직 및 실직 ⑧ 기타
7. 귀하의 가족 연간소득은?
① 2,000만 원 이하 ② 3,000만 원대 ③ 4,000만 원대 ④ 5,000만 원대
⑤ 6,000만 원대 ⑥ 1억 원 이상

귀어·귀촌의 실태와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2012年 12月 29日 印刷

2012年 12月 31日 發行

編輯兼 發行人	金 學 韶
發行處	韓國海洋水產開發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전 화	02-2105-2700 FAX : 02-2105-2800
등 록	1984년 8월 6일 제313-1984-1호

組版・印刷/ 영진피앤피 02-734-3713 정가 15,000원

판매 및 보급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 02-394-0337